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탈북 여성들의 남한사회 정착 성공 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3만여 탈북자들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계기를 만들고자 「통일 맘 정착 수기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응모자격 국내 정착 탈북 여성

접수기간 2017년 4월 1일~6월 30일

공모주제 북한에서의 삶, 탈북 및 남한 사회 성공적 정착 과정
※A4용지 5매 내외/글자 크기 12P/줄간격 160%, 본인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제출방법 응모자 주소지 또는 직장 소재의
민주평통 시·도지역회의로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문의처 민주평통 시·도 지역회의, 사무처 수기 공모전 담당 02)2250-2259, 2249, 2361
참가신청서 다운받기 및 자세한 내용〉 www.nuac.go.kr

2017년 05월 Vol.127

통일시대

COVER STORY

대북정책 진화와 정책 방향

미중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 환경
긴장 속에서도 이어진 남북 스포츠 교류
북한 주민 삶과 의식 바꾼 한국 대중문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핵 문제 해결 위해 동북아 국가들이 함께 대처해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핵심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며, 이를 둘러싼 국가들 간의 이해 차이가 클수록 동북아의 불안정성은 확대될 것이다.

북한으로 인해 비롯된 오늘의 사태는 주변국 모두의 이익을 해치고 있는데도 각국은 뜻을 모아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을 중단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모두가 자국의 입장만 고집하면서 갈등을 지속한다면 결국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는 점점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
3월 3일 '한중 평화통일포럼' 기조강연 중에서

2017. 5월 VOL.127

CONTENTS

10

30

36

42

표지 이야기
스포츠는 늘 남북교류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지난 4월 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 게양된 태극기.

통권 제127호 2005년 5월 1일 창간
발간등록번호 11-1081000-000009-06
ISSN 2508-7177
발행일 2017년 5월 1일
발행인 권태오
발행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우)04605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4
대변인실 02-2250-2264~6
기획편집위원 김근식, 김영수, 김영호, 김진하, 박인휘, 이희옥, 정영순, 조봉현
편집디자인·인쇄 동아일보 출판국·(주)교학사
자료사진 동아DB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입니다.
- 〈통일시대〉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일시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 (www.nuac.go.kr) e-book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02 **이달의 메시지**
북핵 문제 해결 위해
동북아 국가들이 함께 대처해야

06 **커버스토리**
대북정책 진화와 차기 정부 정책 방향
원칙 있는 포용과 압박정책으로 북한 변화 이끌어내야

10 **특집 Ⅰ**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 환경
중국의 대북 설득 한계점
한반도 핵균형 위한 한미 협의 필요

14 **특집 Ⅱ**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중·상급 이상의 핵탄두 제조 능력
한국 안보 위협할 미사일 전력 보유

18 **진단**
북한 경제 현황과 전망
시장화, 북·중 경협으로 활발해진 경제
그러나 미래는 밝지 않다

22 **포커스**
긴장 속에서도 이어진 남북 스포츠 교류
스포츠 교류는 남북 교류의 촉매제이자 마중물

26 **분석**
북한에 파고든 한국 대중문화
북한 주민 생활과 의식 바꾸는
통일 전도사 역할

30 **북한N**
북한의 의료보건 실태
대표적 후진국병 '결핵' 발생
남한보다 5배 이상 높아

32 **과거에서 미래를 찾는다**
갑오개혁과 친일 내각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이
을미사변과 한일합병으로 이어져

36 **With You**
카페 '카작 산곡점' 유진성 대표
미술쇼·콘서트·학부모 모임…
'동네 문화공간'으로 정착

38 **현장을 뛰는 사람들**
박용성 강원지역회의 부의장
南강원과 北강원이 하나 되면
강원 산골이 글로벌 관광지로 우뚝

40 **글로벌 평통**
이기수 서남아협의회 간사
"태권도 외교로 친한파 확보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큰 역할"

42 **지상중계**
2017 한일 평화통일포럼
"북한 핵은 동북아의 공동 위협,
긴밀한 협력 속에 대처 방안 마련해야"

46 **정책회의**
민주평통 직능별 정책회의
문화·체육 통한 통일 공감대 확산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 모색

48 **민주평통 소식**
제140차 운영위원회 개최
권역별 자문위원 연수

60 **협의회 탐방**
전북 부안군협의회
통일 콘서트, 통일안보 견학…
청소년 통일 인식 쑤욱~ 향상

62 **우리 동네 역사 탐방**
개화의 섬 강화도
외세 침략에 맞선 호국의 함성이
바람에 실려 귓가에 맴도네

66 **통일 칼럼**
북맹(北盲) 탈출이 먼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평화 공존에 우선순위를 두고 평화 정착과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사실상의 통일을 지향했다. 2000년 열린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모습.

원칙 있는 포용과 압박 정책으로 북한 변화 이끌어내야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크게 변화해왔다. 진보·보수 간 견해 차이가 큰 대북·통일 문제에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형성하는 것은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차기 정부가 취해야 할 대북·통일정책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았다.

박 종 철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려대 정치학 박사. 미국 하버드대 교환교수, 일본 도쿄대 객원교수,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위원,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 회장 역임. 현 통일부 자문위원. 논문 '김정은 체제의 변화와 우리의 대책' 등

지난 20여 년 동안 진보정부 10년, 보수정부 9년을 거치면서 통일정책도 시계추와 같이 진보에서 보수를 오갔다. 구체적 정책 내용이나 실행 과정에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크게 보면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통일정책의 철학, 목표, 수단 등의 측면에서 대북 포용정책의 패러다임을 공유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비핵·개방·3000 구상)과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및 통일준비론은 레토릭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압박정책의 패러다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단순화의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두 패러다임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입각해 비교할 수 있다.

첫 번째 기준은 통일정책의 목표다. 분단 이후 역대 정부는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최종 목표인 통일에 초점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차이를 보여왔다. 또한 통일의 최종 형태를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로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법적, 제도적 통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었다.

시계추처럼 오간 대북 통일정책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평화 공존에 우선순위를 두고 평화 정착과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사실상의 통일을 지향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분단 관리나 통일 과정보다 최종 목표인 법적, 제도적 통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통일 미래상 제시, 통일 준비에 역점을 두었다.

둘째, 북한에 대한 인식이다. 북한을 어떤 상대로 인식하느냐는 통일정책에 대한 차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진보정부는 북한 체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한 토대 위에서 가능한 한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고자 했다. 물론 진보정부도 북한 체제의 변화를 통일정책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했지만, 평화 정착과 협력을 위해 우선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했다.

반면, 보수정부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 체제의 변화를 통일정책의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북한 체제의 변화는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의 변화, 북한의 합의 준수, 북한 정권 차원의 변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또한 보수정부는 북한을 기본적으로 경계 대상이자 적대 대상으로 인식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세 번째 비교 기준은 정경 연계의 여부다. 특히 북핵 문제가 남북관계의 핵심 변수로 등장한 이후 핵 문제 및 군사 문제와 여타 경제, 사회문화, 인도주의 문제를 어느 정도 연계할 것인지가 통일정책의 핵심 이슈다. 정치·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하고자 하는 정경분리는 대북 포용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의 핵심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정치·군사 문제와 경제 협력을 분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다. 노무현 정부도 정경분리 원칙을 큰 틀에서 유지했다. 진보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핵 문제의 와중에서도 경제 협력의 동력을 유지하고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면 경협을 확대하고자 했다.

그러나 보수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개발을 방조했다고 비판한다. 보수정부는 북핵 문제가 남북관계 전반, 특히 경제 협력의 조건이 돼야 한다고 여긴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핵 문제의 선해결을 강조하고 다른 분야의 남북관계는 북핵 문제의 진전 상황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박근혜 정부도 신뢰 구축 프로세스를 강조했지만,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남북관계를 전면 중단했다.

넷째, 접근 방식과 정책 수단에 대한 것이다. 진보정부는 관여를 통해 북한의 호응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을 중시했다. 반면, 보수정부는 북한의 대외 접근망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중시했다.

보수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 당근보다 채찍이 더 효과적이라고 여긴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한편 대북정책의 수단에는 외교적 압박, 경제 제재, 군사적 시위, 군사적 압박, 선제 타격, 예방 공격 등과 같은 압박 수단과 대화,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안전 보장, 체제 인정 등과 같은 유인 수단이 있다.

진보정부는 햇볕 또는 포용이라는 정책 수단, 특히 경제 교류와 협력의 효과를 기대하고 유인 수단을 활용했다. 포용정책은 바람보다 햇볕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이솝우화를 예로 들었다. 바꿔 말하면 압박은 오히려 북한 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기여할 뿐이며, 포용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가정했다.

그러나 보수정부는 포용정책이 북한의 개방·개혁과 대남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압박 수단을 활용했다. 보수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 당근보다 채찍이 더 효과적이라고 여긴다.

지속 가능한 통일정책 필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통일 패러다임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지속 가능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차기 정부는 어떤 정부라도 압도적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득표로 권력을 장악한 정부가 다수의 반대세력을 상대하게 되고, 대통령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이미 차기 대권을 둘러 싼 물밑 경쟁이 전개되는 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국정을 주도하려는 대통령과 다당제 경향을 보이는 국회가 국정 주도권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것도 익숙한 모습이다. 특히 진보·보수 간 견해 차이가 큰 통일 문제에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통일정책을 형성하는 것은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 차기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에 입각해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평화 공존과 통일 준비의 종합 구도를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통일 비전과 통일전략의 큰 틀 위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정책과 한반도 안정과 남북 화해·협력을 이끌어내는 평화 공존 정책에 대한 종합적 구도가 필요하다. 통일정책은 대북정책에 대해 일종의 지침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으며, 대북정책은 세부적 정책 이행에 의해 최종 목표인 통일을 향해 가는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순차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핵 문제 해결을 모든 분야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그렇다고 북핵 문제 해결을 방치한 채 남북관계 진전을 추진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순차적으로 또는 선별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핵 문제의 우선순위를 인정하되, 그 틀 내에서 가능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숨통을 틀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핵 문제의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를 순차적으로 진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셋째, 선택적 관여정책에 입각해 여러 정책 수단을 배합해야 한다. 통일 문제의 여러 이슈들에 대해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선택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봉쇄 일변도나 관여 일변도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선택적 관여정책은 보상 위주의 정책이나 제재 위주의 대북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선택적 관여정책은 북한의 정책 변화 및 협상의 진전에 따라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다. 선택적 관여는 '퍼주기' 논란을 피하면서도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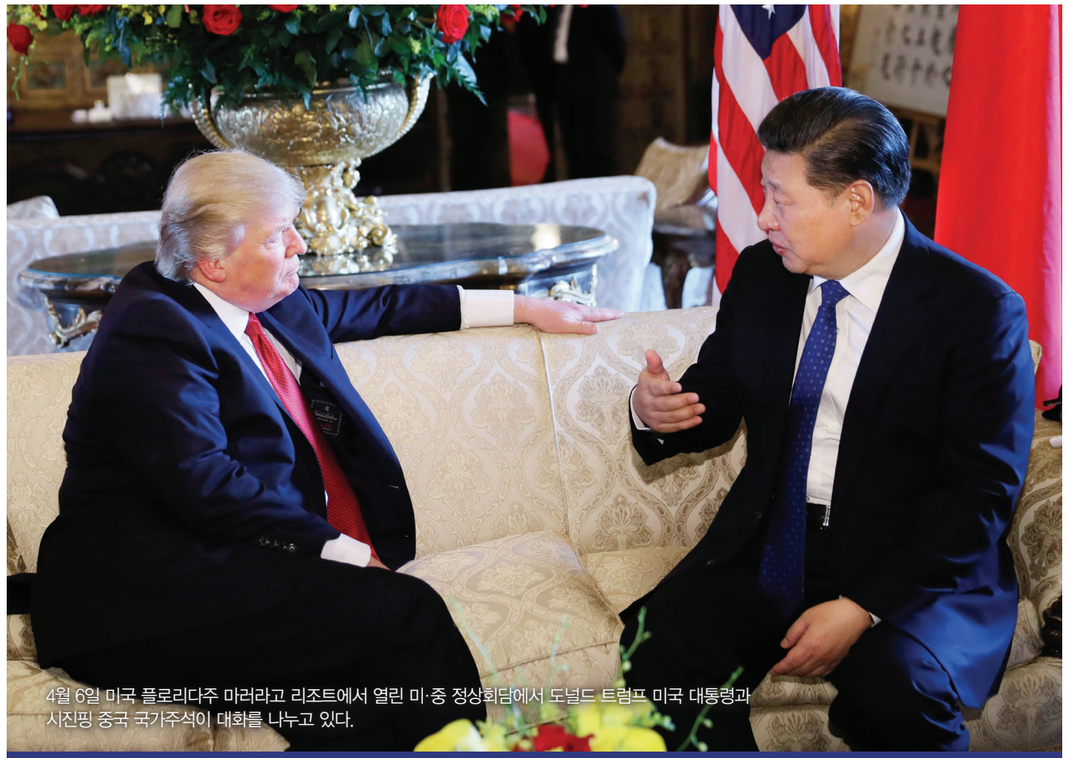
봉쇄 일변도나 관여 일변도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선택적 관여정책은 보상 위주의 정책이나 제재 위주의 대북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선택적 관여는 '퍼주기' 논란을 피하면서도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다.

한편, 이론적으로 볼 때 압박 수단이나 유인 수단은 나름대로 효과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어느 한 가지 정책 수단을 고수하기보다 상황별, 단계별로 압박 수단과 유인 수단을 신축적, 탄력적으로 배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대북 제재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우호적 태도와 협력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보상의 종류 및 규모를 사안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

최소한의 정치·사회적 합의 형성부터

넷째, 대북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 교체에 따른 통일정책의 빈번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동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원칙에 대해서는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면, 통일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상황 변화에 따라 통일정책은 전략적 신축성을 지녀야 하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을 이끌어가는 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또한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남북한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통일 과정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실질적, 내적 통합이 중요하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 이슈에 대해 최소한의 정치·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 억지력 확보의 중요성, 대북 제재의 필요성과 함께 출구전략의 모색 병행, 압박 수단과 유인 수단의 조합,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의 지속, 남북한과 주변국을 포함하는 우회적 다자 협력 방안 모색, 인도적 문제와 인권 문제의 중요성 등에 대한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화적 대북정책을 위한 정치·사회적 합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NUAC



4월 6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중국의 대북 설득 한계점 한반도 핵균형 위한 한미 협의 필요

4월 6~7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로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중국은 2개의 모라토리엄(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병행 논의(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강조했지만 대북특사 파견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최고의 압박과 개입' 전략을 통한 중국과 북한 압박은 통할 것인가.

미·중 정상회담이 4월 6~7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렸다. 주요 의제는 북한 핵 문제와 미·중 무역 관계였다.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한 6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 때문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합의점이 나올지 국제적 관심이 쏠렸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회담 이전부터 강력한 대중 및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3월 29일 '대북 제재 현대화법', '테러지원국 재지정법',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규탄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촉구 결의안'을 일괄 처리했으며, 미 국무부는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법'에 의거해 북한과 이란 등에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 기업과 개인 9곳을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다. 또한 미 행정부는 북한 석탄 수출에 관련된 기업 및 개인들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혀 추후 대북정책이 강경하게 진행될 것임을 암시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무역 문제와 관련해 몇 가지 합의점을 도출했다. 먼저 미·중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100일 계획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4개 분야의 전략대화를 열기로 했다. 경제 분야 대화체에서 미·중은 양국의 경제 관계를 좀 더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김 현 욱
–
국립외교원 교수

미 브라운대 정치학 박사·전 미국 UC샌디에이고 방문교수.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

엇갈린 미·중의 대북정책

문제는 북핵 문제이다. 양측의 대북정책 관련 태도는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여전히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틸러슨 장관의 중국 방문 당시 중국 측은 2개의 모라토리엄(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병행 논의(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강조했다. 양측은 여전히 북핵을 푸는 방법론에서 다른 방향을 강조했다. 단지 북핵 문제가 심각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는 합의를 이루었다.

현재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소위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며, 동시에 거래를 이루려는 성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을 때리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중국의 강한 대미 보복조치(환율조작국 지정, 중국산 수입품 45% 관세 부과 등)는 미국에도 큰 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산 수입품은 미국산 수출품의 중간재이며, 관세 부과는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세금 부과를 의미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보복관세 대응, 희토류 등 주요 물품 제공 거부, 1조2000억 달러의 미국 국채 매도 등 보복조치가 가능하다. 이는 전 세계 경제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가 초반엔 강경한 대중국 정책으로 미·중관계가 위험하게 되는 분위기였지만, 미·중 간 일종의 딜을 통해 미·중 양국은 각국의 우선순위가 높은 국익을 챙기는 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 즉, 미·중 양국은 무역 및 북한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양국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타협해나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위기가 불거지고 있다. 대북정책에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선제 타격론 등 한반도의 위기 증폭으로 한반도가 전쟁 위험에 놓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강경한 대미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은 4월 18일 평양에서 영국 BBC와 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가 필요하다"며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로 더 많은 미사일 발사를 시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미국이 우리를 향한 군사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리의 방식과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미국이 무모하게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다면 즉각 전면전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4월 15일 열병식에서 최룡해 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핵전쟁에는 우리 식의 핵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현재 한반도 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이 언제 이행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날 평양은 태양절 행사 준비를 하는 등 평온한 모습이었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위기가 불거지고 있다.
대북정책에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선제 타격론 등
한반도의 위기 증폭으로
한반도가 전쟁 위험에
놓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역할론 강조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 옵션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 중심의 아시아정책이 혼란에 이르게 된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순간 일본은 안보 불안감을 느끼며 자체 핵무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해 동아시아전략을 추진하고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아시아정책은 망가지게 된다.

두 번째는 대화인데, 현재 미국은 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 또는 적어도 북한 핵의 동결을 이루고 싶어 하는 반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할 것이다. 서로 다른 대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 자체는 무의미하게 된다.

세 번째는 군사적 옵션이다. 실제 1994년 미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 1차 핵위기 당시 북한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 때문에 취소됐지만, 그때는 지금과 상황이 매우 달랐다. 북한의 핵 개발 단계는 매우 미미했으며,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 역시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북한의 대한국 보복으로 한국 국민들과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의 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됐다.

현재는 이 같은 위험이 더욱 크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경우 핵시설 타격 자체가 힘들 뿐만 아니라, 선제 타격을 피해 보존된 북한의 2차 보복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은 한국을 핵폭격의 피해지로 만들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타격한다면 한국 내에 거주하는 주한미군과 미국 국민들 역시 피해 당사자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한반도를 전쟁 상태로 몰아넣을 군사적 옵션은 현실성이 떨어지게 되며, 결국 미국은 이전보다 더욱 강한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 등으로 중국 역할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억지력 강화와 군사적 옵션 가능성을 내비치며 현재 칼빈슨 호 등 항공모함 3척을 한반도 해역에 급파했다.

현재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으로 정리된다. 즉, 과거 전략적 인내와는 다른 수준의 압박과 제재를 가할 것이며, 여기에는 군사적 옵션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두 가지 시나리오

그러나 현재 한반도는 미·북 간 강 대 강 분위기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으며, 비록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적지만 미국의 대북 군사적 옵션 카드도 여전히 유효한 수단으로 남아 있다.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4월 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공동 언론 발표에서 "북한은 이 지역 미군의 결의와 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대북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중국이 대처하지 않으면 미국과 동맹국이 할 것"이라며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고위 외교 관료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조건(Precondition)"이라고 밝혔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인룡 차석대사는 4월 17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미 간)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 두 문제(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는 서로에게 제약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중국의 대북특사 파견 역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갈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이며, 향후 미·북 간 치킨게임의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이에 기반을 두고 북·미 대화에 나서려는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북 설득력도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으며, 결국 두 가지 시나리오에 봉착할 것이다. 첫째는, 미국의 대북 대응이 무엇일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 및 북핵 동결에 실패할 경우 이를 빌미로 대중국 압박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경우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핵태세 검토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핵 균형을 잡기 위한 한미 간의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핵 위협의 균형 및 공포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남북한 간 대화는 불가능하다. 한반도의 안정과 대화 국면을 위해 남북한 간 핵 안정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 NUAC

미·중 정상회담 만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외손녀가 중국 민요를 부르고 있다.

북한이 4월 15일 태양절 행사에서 공개한 KN-11(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중·상급 이상의 핵탄두 제조 능력 한국 안보 위협할 미사일 전력 보유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북한의 핵 개발과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북한의 핵전력 현황과 발전 추세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았다.

북한의 핵전력이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 핵전력 고도화의 핵심은 핵물질 보유량 증가, 핵탄두 제조 기술력 향상, 탄도미사일 능력의 향상이다.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2012년 이후 지난 5년간 북한의 핵전력은 과거에 비해 가파르게 신장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핵전력에 대한 과신과 맹신으로 한국과 미국에 대한 강경한 강압정책을 투사하고 있으며, 핵·미사일 도발 자제와 비핵화 조치를 염원하는 국제사회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레짐은 지속적으로 공고화될 것이며, 제재 국면은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핵 국면에 대응해 한국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견인해야 한다. 이를 위한 외교안보 전략을 구상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은 바로 북한의 핵전력을 엄밀하게 구명하는 것이다.

우려되는 북한의 핵탄두 제조 능력

북한의 핵탄두 제조 기술력은 현재 어느 수준일까.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까. 아쉽게도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북한 스스로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분석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이 강행한 핵실험 결과와 국제사회가 객관적으로 확인한 핵시설을 기준으로 북한의 핵능력의 대강을 가늠할 수 있다.

정성윤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고려대 정치학 석사, 고려대 국제정치학 박사, 미국 아메리칸대 객원연구원,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역임, 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의 핵탄두 제조 기술력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핵무기 선진국들과 비교해볼 때 현재 북한은 중·상급 이상의 핵탄두 제조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북한은 2017년 현재 핵 기술 면에서 핵분열탄과 핵융합탄(수소폭탄)의 중간쯤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세대 핵분열탄의 경우 북한이 2, 3차 핵실험을 통해 유의미한 능력을 과시했지만 폭발력이 표준형 핵분열탄에 미치지 못해 그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왔다. 하지만 북한이 2016년 5차 핵실험에서 10~30킬로톤(kt)의 폭발력을 과시한 것으로 볼 때 이미 완성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통상 표준형 핵분열탄의 경우 그 폭발력은 20킬로톤 내외이다.

북한이 1세대 핵분열탄 기술을 넘어 핵융합 기술을 원용한 증폭핵분열탄 제조 능력을 일부 부유했을 가능성도 있다. 4차 핵실험 직후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당국은 4차 핵실험을 증폭핵분열탄 실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최근 증폭핵분열탄 실험에 필수적인 삼중수소를 5메가와트(MWe) 원자로를 통해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주요 이유이며, 북한 스스로 4차 핵실험을 '시험용 수소탄'이라고 주장한 것이 부가적 이유이다.

북한의 증폭핵분열탄 시험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 1세대 핵 기술 능력을 2, 3차 그리고 5차 핵실험을 통해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향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그 방향은 지난 4차 핵실험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증폭핵분열탄의 폭발력 강화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마도 북한이 폭발력 50~200킬로톤 정도의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성공한다면 이를 수소탄 완성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느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핵무기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궁극적으로 핵물질 보유량과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에 좌우된다. 핵탄두 제조에는 무기급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다. 북한은 현재 영변의 5MWe 흑연로를 통해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다. 100% 가동하면 연간 8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연간 3, 4kg 정도 생산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과 과학적 분석을 원용하면 북한은 2016년 10월 기준 약 19~48kg의 플루토늄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2020년경에는 약 31~64kg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고농축 우라늄의 경우 현재 북한이 공개한 시설만을 기존으로 할 경우 2016년 하반기 기준 약 200kg 내외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매년 40kg 정도씩 보유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무기 능력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	3차 핵실험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실험 일자	2006. 10. 9	2009. 5. 25	2013. 2. 12	2016. 1. 6	2016. 9. 9
지진 실체파 규모	3.0~4.3mb	4.5~4.7mb	4.9~5.1mb	4.8~5.1mb	5.0~5.3mb
폭발 규모 환산	1킬로톤 미만	3~4킬로톤	6~7킬로톤	6킬로톤	10~30킬로톤
사용 핵물질	플루토늄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추정)	플루토늄, 중수소, 삼중수소 (증폭핵분열폭탄 추정)	고농축 우라늄 (추정)

북한은 지금까지 5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일정 정도 이상의 핵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폭발력 15킬로톤 내외의 표준형 핵폭탄 제조에는 통상 플루토늄 3~6kg, 고농축 우라늄 10~40kg이 소요된다. 제조 과정에서의 핵물질 손실율과 소형화 능력 그리고 제조 핵탄두의 성격에 따라 핵물질 소요량은 변동된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북한은 2016년 하반기 기준 대략 8~3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2020년경에는 14~57개의 핵무기 보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전력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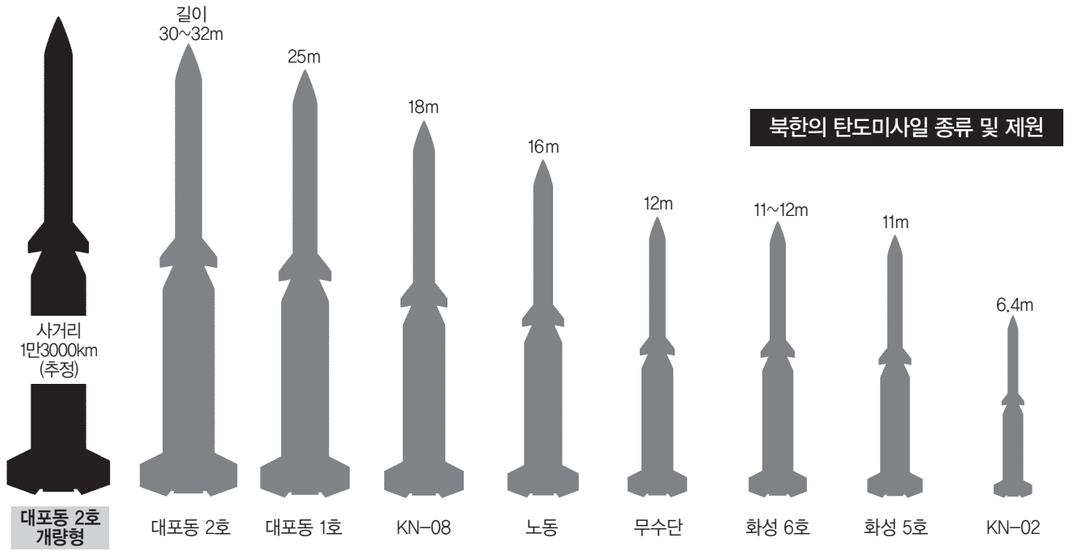
북한은 현재 스커드 미사일 200~800기, 노동 미사일 90~200기, 무수단 미사일 50기 미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6기 이상 등 대략 300~900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은 사거리에 따라 단거리 미사일(스커드 B·C계열, KN-02), 준거리 미사일(스커드 ER, 노동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대포동 1호, 노동 미사일, 북극성 계열 SLBM 개량형), 장거리 미사일(대포동 2호 계열, KN-08 등의 ICBM)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북한이 보유한 290~1000기 정도로 추정되는 스커드 계열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고, 대포동 1호와 무수단 미사일은 일본과 괌 미군기지를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노후화된 구형 스커드 미사일 계열을 제외하면 실제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은 약 500개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보유한 다량의 탄도미사일의 위력은 미사일에 탑재되는 탄두의 폭발력에 좌우된다. 북한이 현재 보유한 미사일의 탄두 무게는 그간 소량화 진척으로 대략 1000±200kg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힘들게 개발하고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에 재래식 폭탄 탄두를 탑재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의 대부분에는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를 설치할 것인데, 이 경우 위력은 대략 축구장 1개 내외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여타 미사일들의 위력은 탑재하는 핵탄두의 폭발력에 따라 결정된다. 표준형 핵무기인 15~20킬로톤 정도의 핵탄두는 그 위력이 폭발 지점 반경 2km 내외의 거주민 약 50%가 사망하는 정도의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피해 및 살상 범위는 핵탄두가 고고도 폭발이냐 지표면 폭발이냐 그리고 인구 밀집의 정도 및 풍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 즉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위력은 그 유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핵탄두 탑재 여부 및 핵탄두의 폭발력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은 추진 연료와 엔진의 고도화이다. 스커드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지금까지 액체 연료를 사용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고체 연료 엔진을 개발하고 시험 중임을 보여주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액체 연료는 추진 제어에는 유리하지만 미사일 발사 수 시간 전에 주입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하고 대개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술적 측면에서나 관리 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다. 반면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하고 안전하며 지상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군사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대포동 2호 개량형	대포동 2호	대포동 1호	KN-08	노동	무수단	화성 6호	화성 5호	KN-02
사거리(km)		1만	2500	1만2000	1300	3000	500	300	120~140
발사 중량(kg)		7만9200	3만3400	4만 이상(추정)	1만7800	1만2000	6500	6400	2000
탄두 무게(kg)		650~1000	500~700	–	700	650	770	1000	500
로켓 단수		3단	2단	3단	1단	1단	1단	1단	1단
		시험발사 중			실전 배치				

아울러 탄도미사일의 재진입 기술 여부도 능력 측정의 중요한 요소다. 2016년 북한은 등근 돔 형태의 재진입체를 지상에서 로켓 화염으로 실험했다. 돔 형태는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대기의 저항을 받으며 속도가 줄어든다. 따라서 탄두 부분의 온도도 급격히 떨어진다. 이처럼 돔 모형으로 탄두 모형을 바꿈으로써 재진입 속도가 줄어들면 미사일 방어에 취약해지는 단점이 있다. 북한은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탄두의 기동형 재진입(MARV)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기술은 전용 정찰위성의 도움으로 탄두의 유도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 평가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이동식 발사대(TEL) 보유량이다. 미 국방부는 '2015년 북한 군사동향 의회보고서'에서 북한은 2015년 기준 TEL을 200기가량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주로 스커드 B·D계열의 단거리 미사일용 TEL 100기, 스커드 ER·노동·무수단 등 중거리 미사일 전용 TEL 100기, 그리고 ICBM용 TEL 6기 정도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용 수중 TEL 1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특히 TEL을 이용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군사위성 등을 통해 조기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이 현재 구축하고 있는 킬체인(Kill Chain)의 효용성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직은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 결함

북한의 미사일 전력 고도화의 추세를 보면 한국에 대한 안보 위협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적 안보 위협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는 점이다. 2016년 이후 최근까지 북한이 보여준 미사일 능력을 종합하면 사거리 500~1200km의 스커드 계열과 노동 미사일 능력은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수단 계열 미사일과 SLBM,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능력은 아직 기술적 결함이 분명하며 실제 시험발사 성공 가능성도 낮다. 북한이 미사일 설계값과 실제 실험 측정값을 대비해가며 이러한 미사일 전력 결함을 보완하려면 최소 3,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NUAC

시장화, 북·중 경협으로 활발해진 경제 그러나 미래는 밝지 않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강력한 경제 제재를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곧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던 북한 경제는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있다. 원인과 전망을 분석했다.

김 석 진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경제학 박사. LG경제연구원 및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주요 연구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북한 경제의 성장과 위기〉 등

20여 년 전 '고난의 행군' 시절과 비교해보면 오늘의 북한 경제는 신기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당시 북한에선 대기근으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다. 북한이 그나마 연명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일본, 중국, 남한 등으로부터 받은 대규모 원조 덕분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대외관계가 악화되면서 식량 원조는 크게 줄고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시작됐으며, 북·일 무역과 남북 교역이 연이어 중단됐다. 북한은 또다시 '고난의 행군'을 겪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 후 북한 경제가 보인 행보는 일반적 전망과 크게 달랐다. 무엇보다 식량 사정이 뚜렷이 나아졌다. 예전에 두 끼만 먹다가 이제 세 끼를 먹을 수 있게 된 사람이 많아졌다. 음식의 질도 좋아지고 종류도 다양해졌다. 전국적으로 많은 시장이 생겨나고 거래 규모가 커졌다. 평양을 비롯한 여러 대도시에서는 건설 붐이 일어 새 아파트, 새 건물이 제법 많이 지어졌다. 공장, 광산, 발전소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진행됐다. 트럭, 버스, 승용차 등 각종 자동차도 크게 늘었다. 특히 이목을 끈 것은 휴대폰이 수백만 대 보급돼 북한에도 이동통신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교역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사진은 북·중 경제무역 관련 박람회 모습.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원조도 거의 끊기고 제재까지 받고 있는데 오히려 경제 사정이 좋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정권이 개과천선해서 좋은 정책을 편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그들의 경제정책, 그들이 한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들여다보면, 여전히 구식 사회주의 정책, 즉 국영기업 중심의 자립경제 노선이 고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경제의 주된 회복 동력은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즉 정권이 아니라 주민에게서 나온 것이다. 흔히 말하는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바로 그것이다. 시장화라고 하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유통업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유통만 활발해졌을 뿐 생산은 별 볼 일 없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화는 유통업만이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북한 주민, 강인한 생존력 발휘

북한 시장화의 출발점은 개인 농업이었다. 기근을 겪은 북한 주민들은 배급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식량을 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다.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스로 농사를 짓는 것이다. 농촌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수 도시 주민도 어디든 땅이 있으면 개간해서 소토지 농사를 짓고 식용 가축을 기르게 되었다. 개인 농업은 주로 자가소비를 위한 것이었지만 점차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상업적 농업의 성격도 띠게 되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당국은 개인농업을 묵인하고 있고,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료를 받으면서 사용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먹고살기 위한 북한 주민의 활동은 농업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가장 활발한 활동은 다름 아닌 개인 유통업(소매업과 도매업)이었다. 북한 전역으로 시장이 확산되어, 중국에서 들여온 각종 상품, 개인 농사로 생산된 농산물, 협동농장에서 빼돌려진 농산물, 개인들이 생산한 가공식품이나 공산품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발달로 상품 및 여객 운송에 대한 수요가 커지자 개인들이 트럭이나 버스를 사서 운수업을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음식업을 비롯한 개인 서비스업, 개인 어업이 출현한 데 이어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도 개인 사업가들이 등장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영기업이나 국가기관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대신 해당 기관에 상납금을 바친다.

아래에서 시작된 시장화는 위로도 확산되었다. 많은 국영기업과 국가기관이 시장 거래에 참여하고 개인 사업가들과 연계를 맺고 있다. 국영기업, 국가기관의 시장 참여는 대외무역을 계기로 한 경우가 많다. 국영 무역회사들이 수출품을 생산 및 조달하는 과정, 그리고 수입품을 내다 파는 과정에서 시장 및 사경제와 연결된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건설업이다. 특히 아파트 건설의 경우 사업 주체인 국영기업, 국가기관이 개인 사업가에게 건설과 판매를 위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여타 부문

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사경제와 국영경제가 혼합되면서 국영경제가 사경제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북한 정권은 시장과 사경제를 때로는 묵인·허용·장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단속·억압·통제하기도 했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지난 몇 년 동안은 유화적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공식적 및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시장과 사경제로부터 거둬들이는 재정 수입이 상당히 중요하고 국영기업, 국가기관 중에도 시장 및 사경제와의 거래에 의존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시장과 사경제에 편승하는 국영경제

북한의 경제 회복을 이끈 또 하나의 요인은 대외 경협 확대이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남북 경협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북·일 무역과 남북 교역이 중단되자 2011년 이후로는 북·중 무역이 북한 대외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북·중 무역은 2000년대 초 이후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1년부터는 더욱 크게 증가했다. 중국 기업의 북한 투자도 많이 늘어났다.

북·중 경협 확대를 중국 정부의 북한 지원 정책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통념이 널리 퍼져 있지만, 대부분의 북·중 경협은 정치적 원조가 아니라 상업적 거래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2000년대에 중국의 경제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해외 자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중국이 해외 자원시장의 큰손이 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도 크게 올랐다. 중국발 자원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은 자원 수출국들에게 큰 호재가 되었는데, 북한도 그 혜택을 함께 입을 수 있었다.

북한의 대중국 광산물 수출은 2005년에는 2억 달러를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20억 달러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 누린 경기 호황 중 상당 부분은 바로 자원 수출 호조 덕분이었다. 수출 증가로 획득한 외화로 각종 산업용 자재와 기계설비, 자동차, 휴대폰 등을 수입할 수 있었고, 이것이 다시 내부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2014년 정점을 지난 후 북한의 자원 수출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해외 자원에 대한 수요가 부진해졌고, 이에 따라 국제 원자재 가격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6년 1월 4차 핵실험 이후 3월에 나온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북한의 광산물 수출에 대해 제한 및 금지조치를 취함에 따라 북한의 수출 여건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견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6년 북한의 광산물 수출 및 전체 북·중 무역은 오히려 약간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2270호에 규정된 민생용 예외조항 때문에 수출 제한조치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탓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11월에 나온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생용 예외조항을 없애고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품목인 석탄 수출에 연간 상한제를 적용했으며, 추가로 여러 광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2321호를 집행하기 위해 올 2월에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북·중 무역이 크게 위축되면서 북한 경제 전반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이 평양의 백화점을 시찰하고 있다.

1 평양시내 결혼식 풍경.
2 평양과 중국 선양을 오가는 고려항공 여성 승무원들.
3 북한의 장마당은 북한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했다.

양대 성장요인 중 하나였던 대외 경협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이제 북한은 시장화에 의지해 난관을 헤쳐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도 북한 시장과 사경제가 순조롭게 발전해 경제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북한 시장화, 근본적 한계에 직면

근본적 문제는 북한의 시장화가 어디까지나 아래로부터 나타난 자생적이고 비공식적인 개혁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북한의 시장화를 중국의 개혁·개방과 비교해보면 그 한계가 분명하다. 중국의 개혁·개방도 처음에는 자생적이고 비공식적인 개혁이었지만 덩샤오핑을 비롯한 공산당 지도부의 승인과 지지를 얻어 공식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으로 발전해나갔다. 무엇보다 중국에서는 이념 해방이 있었고 정치적 해빙까지 이뤄져 보통 사람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사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중국의 사경제는 소규모 개인사업에 머물지 않고 수십, 수백, 수천 명을 고용하는 큰 규모의 기업으로 발전했다.

이와 달리 북한의 신흥 개인사업가들은 여전히 정치적 위험에 노출돼 있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장도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돈을 벌어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렵고,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기업은 별로 출현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성장도 기껏해야 서비스 주도 저성장에 머물 뿐 제조업 주도 고도성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시장 및 사경제의 상당 부분이 북·중 무역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경제 제재는 시장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 경제는 정권이 핵 및 미사일 개발 노선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진입하는 길을 선택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NUAC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대결 후 선수들이 'Peace and Sports'라고 쓰인 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포츠 교류는 남북 교류의 촉매제이자 마중물

지난 4월 5일은 남북 스포츠 교류사에 남을 역사적 날이었다. 평양 김일성경기장에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됐다. 그로부터 22분 후, 강릉 아이스하키센터에선 인공기가 게양되고 북한 국가가 연주됐다. 스포츠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

김동선
–
경기대 체육대학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한양대 체육학 석·박사. 민족통일체육연구원 부원장, 경기대 체육대학장 역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화예술체육분과 위원 및 간사.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전문위원

북한은 지난 2월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제8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등에 7명의 선수를 출전시켰다. 북한의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참가는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지난 4월 1일 북한은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단을 한국에 전격 파견했다. 남북한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실험과 핵 위협으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와중에 방한한 것이다. 선수 20명과 임원 10명으로 구성된 북한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중국 베이징을 거쳐 입국한 뒤 강릉으로 이동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테스트 이벤트로 열린 이 대회는 개최국인 한국, 북한, 영국,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호주 등 6개국이 참가해 풀리그로 진행됐다.

4월 2일엔 우리 여자축구 대표팀이 평양에서 열린 2018 아시안컵 예선 B조 경기 참가를 위해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평양을 방문했다. 남한 축구 대표팀이 방북 경기를 치른 것은 27년 만이다. 1990년 10월 11일 우리 대표팀이 평양에서 북한과 남북 통일축구 친선 경기를 펼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2010 남아공월드컵 출전을 위한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남자축구 대표팀이 북한과 같은 조로 2008년 평양에서 경기를 할 기회가 있었으나, 애국가 연주와 태극기 게양 등을 문제 삼은 북한의 거부로 제3국인 중국 상하이에서 원정 경기를 가졌다. 2015년 8월엔 경기·강원팀과 임원 80여 명이 평양에서 열린 유소년축구대회 참가를 위해 방북한 바 있다.

평양에 울려퍼진 애국가와 태극기 게양

2017년 4월 5일은 남북 스포츠 교류사에 남을 역사적인 날이라 하겠다. 이날 오후 6시 23분 평양 한복판에 있는 김일성경기장에 한국 여자축구 윤덕여 감독과 선수들이 입장하면서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됐다. 김일성경기장에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된 것은 사상 최초였다.

평양에서 애국가가 처음 연주된 것은 2013년 9월 세계역도대회로, 그동안 북한은 평양에서 남한의 국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남북 대결의 경우 제3의 장소에서 열곤 했다. 하지만 이번엔 아시아축구연맹이 대회 유치 조건으로 국가 연주 및 국기 게양과 관련한 국제경기 관례 준수를 북한에 요구했고 북한이 이를 수용했기에 가능했다.

그로부터 불과 22분 후, 강릉 아이스하키센터에선 인공기가 게양되며 북한 국가가 울려 퍼졌다. 2연패 중이던 북한은 이날 영국과의 경기에서 서든데스로 진행된 연장전에서 득점하며 3-2로 승리한 것. 승리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연주하는 관례에 따라 인공기를 게양하고 북한 국가가 연주된 것이다. 이날 새벽 북한은 함경남도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스포츠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4월 6일 또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날은 1896년 1회 아테네올림픽 개최일이자 2013년 유엔이 스포츠를 통한 개발과 평화를 도모하자는 뜻에서 지정한 '국제 스포츠 평화의 날'이기도 하다. 그러한 의미에 부합하듯 강릉하키센터에서 사상 여섯 번째로 아이스하키 남북 대결이 벌어졌다. 응원전 또한 관심사였다.

지난 2월 중국에서 이창복 남북공동응원단 단장과 북한의 박명철 6·15 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위원장이 만나 남북 체육 교류 시 상호 간에 공동 응원을 하기로 합의했던 대로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강원본부 등이 북한 대표팀을 위한 '남북공동응원단'을 구성했다. 대신 평양에서 열리는 '2018 여자아시안컵축구대회' 예선에 참가하는 남한 선수들을 북측 공동응원단이 응원하기로 했던 터였다.

강릉에서 열린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대결에서 1000여 명의 공동응원단이 하늘색 한반도기가 새겨진 티셔츠 차림으로 한반도 깃발을 들고 북한 선수들을 응원했다. 6000여 명의 관중은 경기 후 3-0으로 승리한 한국 선수뿐 아니라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한 북한 선수들에게도 큰 박수를 보냈다. 국제아이스하키연맹 르네 파젤 회장은 경기를 참관한 후 남북한 선수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국제아이스하키연맹은 선수들에게 '스포츠 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Peace and Sports'라고 쓰인 엽서를 선물했다.

7일엔 평양에서 한국 여자축구팀이 강호 북한 팀과 경기를 가졌다. 절대 열세이고 홈경기인 북한과의 대결은 한국 대표팀에겐 큰 부담이었다. 여자 대표팀은 남자 대표팀

꽉 막힌 남북관계를
해소하기에 스포츠만큼
확실한 매개체는 없다.
남북 상호 방문 스포츠 교류가
성사됨으로써 또 다른 교류도
기대해볼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긍정적인
효과만으로도 만족스럽다.

에 비해 지원도 열악하고 국내 방송사가 중계권을 구매하지 않아 중계도 되지 않았지만 선수들 전원이 투혼을 다한 결과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어 11일에는 우즈베키스탄전에서 4-0으로 승리하며 아시아 본선 티켓을 따내고 13일 귀국했다.

한편 8일 한국 여자아이스하키 팀도 네덜란드전에서 2-0으로 승리함으로써 5전 전승을 거두고 사상 첫 세계선수권 3부 리그로 승격됐다. 북한도 슬로베니아와의 경기에서 4-2로 승리함으로써 2승 3패로 5부 리그로의 강등을 면했다. 경기 후 북한 선수들은 공동응원단을 향해 두 손을 크게 흔들며 답례했다.

승리 팀인 북한 국가가 연주된 뒤 북한 선수들은 경기장을 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인공기를 높이 든 주장 김금복과 려성희를 선두로 링크를 한 바퀴 돌며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어 고마움을 드러냈다. 한호철 북한 대표팀 매니저는 "여러분 모두의 응원에 힘을 받아서 선수들이 경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기도 했다. 남북공동응원단의 열렬한 응원은 북한 선수들과 임원진에게 동포애를 느끼게 해준 계기였으리라 생각된다.

폐회식을 끝으로 북한 선수단은 강릉에서 펼쳐진 테스트 이벤트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9일 출국했고,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은 본선 진출권을 획득하고 13일 귀국했다.

한바탕 '스포츠 축제'는 끝났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이뤄진 이번 남북 교차방문 스포츠 교류를 해부해보고자 한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해소하기에 스포츠만큼 확실한 매개체는 없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실로 오랜만에 이뤄진 남북 교류였다.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선수단 교차방문 형식으로 이뤄진 교류이긴 했지만 이번 교류가 향후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정부는 남북의 교차방문 교류에 대해 미리 예정된 국제스포츠 행사이고 국제 관례에 따라 북쪽 선수단의 방남과 우리 선수단의 방북을 승인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이번 교차방문 교류는 남북이 직접 접촉하지 않고 각각 대회를 주관한 국제아이스하키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을 통해 선수단 방문 통보와 신변안전 보장 등의 절차가 진행돼 이루어졌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기대

북한의 정치적 의도 여부에 초점을 맞추지 말자. 남북 상호 방문 스포츠 교류가 성사됨으로써 또 다른 교류도 기대해볼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긍정적인 효과만으로도 만족스럽다.

그동안 있었던 남북 스포츠 교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스포츠 교류의 확대 가능성과 효율적 성과는 정치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 그럼에도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과 이를 위한 접촉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스포츠 고유의 순수성에 있다.

이제까지 남북 상호 간의 스포츠 교류협력이 남북관계 경색 국면 타개를 위한 선제적 역할을 해온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협력이 재개돼야 한다.

남북한의 교류는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성사 여부가 정해지는 한계점을 갖는다. 하지만 스포츠는 남북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다양한 국제 대회가 세계 곳곳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이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준다. 실제 그동안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은 주로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스포츠를 통한 남북 교류협력은 상징적인 효과가 크다. 일례로 국제무대에서 최초의 남북 단일팀으로의 공동 입장 및 참가, 하얀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는 통일 민족의 상징성을 갖는다.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 스포츠 조직의 관심과 지원도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유용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1

2

3

4

1 평양 김일성경기장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2 평양에서 열린 여자축구 남북 대결.
3 강릉 빙상경기장에 인공기가 게양되고 있다.
4 남한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드는 북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들.

비용실효적인 수단(Cost Effective Means)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볼 만하다. 북한의 참가 자체만으로도 평창동계올림픽의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미국의 소리 방송(VOA)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리용선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은 "통일에 이바지되는 일인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이번에 온 북한 아이스하키 선수단의 고위 관계자가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2017년 2월 21일 삿포로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한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긍정적으로 언급했고, 내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20회 국제태권도대회에 한국 선수를 초청하는 데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관한 남북 체육회담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새 정부도 비정치적인 스포츠 분야를 가교로 해서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줘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한반도 평화와 안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Powerful Lever)이라면, 남북 스포츠 교류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가장 비용실효적인 수단(Cost Effective Means)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남북 교차방문 스포츠 교류는 향후 여타 교류의 촉매제의 소임과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다. NUAC

최신 드라마 '도깨비'가 벌써 북한에서 큰 인기다.

북한 주민 생활과 의식 바꾸는 통일 전도사 역할

북한에서 우리 드라마와 대중가요가 인기라는 건 잘 알려진 이야기다. 최근엔 북한에서도 정보통신 제품 보급·발달로 최신 남한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생활과 사상을 바꾸고 있는 남한 대중문화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광 백
–
통일미디어 대표

원광대 법과대학 중퇴,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졸업. 자유조선방송 대표, 계간 시대정신 편집장 역임. 시민행동21 지방자치센터 소장, 현 통일미디어(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대표

요즘 북한에서 유행하는 드라마나 영화는 한국에서 최근 방영했거나 상영한 최신작들이 많다. '도깨비', '별에서 온 그대', '장옥정 사랑에 살다', '해를 품은 달', '태양의 후예' 등이 대표적이다. '암살', '내부자들', '국제시장', '인천상륙작전' 같은 영화도 북한 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북한 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서 가장 널리 유통되는 (한류 및 해외) 콘텐츠 가운데 하나는 성인영화라고 한다. 사회주의 도덕관에 억눌린 북한의 성문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의 시청률도 높아지고 있다. 2015년 미국 인터미디어가 탈북민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서 본 남한 방송 프로그램에 '삼시세끼', '꽃보다 할배', '1박2일',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같은 탈북민 출연 프로그램을 본 경우도 있었다.

30대 탈북 남성은 "북한에서 '경찰 특공대'를 봤는데, 경찰의 복장과 훈련 수준, 착용한 장비 등을 보고 놀랐다. 북한은 장비가 부족하다. 내가 근무한 곳은 방독면도 견습용 5개밖에 없었다"며 자연스럽게 남과 북의 격차를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 광고를 보는 주민들도 많다고 한다. 2013년 탈북한 이민영 씨는 "북한에 유입되는 한국 드라마는 영상 그대로 녹화되기 때문에 광고마저 그대로 나온다. 자본주의 문화를 처음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같은 해 탈북한 박홍식 씨는 "북한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데, 남한 광고를 보면 먹음직스러운 음식 선전이 꽤 많다. 어릴 때부터 남한이 못산다고 배웠는데, 드라마 CD 등에서 광고를 보고 편견이 깨졌다. 북한에서 남한 광고를 보고 탈북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다"고 증언했다.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이 즐겨 듣거나 부르는 한국의 대중가요는 셀 수 없이 많다고 말한다. 한 30대 탈북 여성은 "북한에서 불렀던 한국 가요가 수백 곡이었는데, 특히 '무조건'은 농촌 동원을 나가 저녁에 오락회를 할 때, 남학생들이 목이 터져라 부르며 춤추고 놀았던 노래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고 회상했다.

'도깨비', '태양의 후예' 인기

북한 10대 청소년들은 SES, 핑클과 같은 과거 걸그룹은 물론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는 K-팝이나 드라마 OST도 즐겨 듣는다고 한다. 청진 출신의 한 20대 탈북 여성은 "북한에서 마을 오빠들이 춤을 추며 '오빠는 청진 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강남 스타일'을 개사한 노래였다"고 말했다. 2015년 중국의 한 무역업자는 사업차 중국을 방문한 북한 무역업자들과 노래방에 갔는데, 북한 무역업자가 장윤정의 '초혼(드라마 이산 OST)'을 불러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도 있다.

지난 2, 3년 동안 북한에서 나오는 소식통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 노래 등을 타고 한국의 생활 모습이 북한 주민의 생활을 바꾸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호밀빵과 초코머핀을 일부러 구해 먹는 북한 주민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 국영기업에서 각종 빵과 제과 생산을 늘리기도 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의 돈주(신흥 부유층)와 무역일꾼, 간부들은 북한산 빵을 사먹지 않고 백화점이나 일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산 빵을 사먹거나, 중국에 나가는 무역 일꾼을 통해 한국산 빵을 구해 먹는다고 한다.

한국 드라마에 흔히 등장하는 '쿠쿠' 전기밥솥은 북한 주민의 대표적 혼수품이 됐다. 이 때문에 쿠쿠 전기밥솥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평안남도 평성시장에서 한국산 쿠쿠 밥솥은 북한돈 24만8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중국산 전기밥솥은 상품이 17만5000원, 하품이 8만1000원 정도에 판매된다. 북한산 알루미늄 밥솥은 7만 원에서 16만 원짜리까지 있다. 밀수하다 압수된 물품에 한국산 밥솥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드라마와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인스턴트커피를 마시는 북한 주민도 늘고 있다고 한다. 2010년대 이후 동서식품의 '맥심'을 마시는 북한 주민이 크게 늘었다는 증언이 나온다. 중간급 간부와 돈주들 사이에서는 한국산 소주 '참이슬'이 기념 파티 선물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북한에 확산되고 있는 한류가 북한 주민의 식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한류는 북한의 주거 생활도 바꾸어놓고 있다.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국식으로 살림집(아파트) 내부 구조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의 북한 통신원은 "최근 평양은 물론 지방의 주요 도시에서 내부 구조를 한국식 부엌과 전실(거실)을 갖춘 구조로 바꾸고 있다"고 전해왔다. 비용은 6000달러 정도인데, 공사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호텔인 이른바 '특각' 건설부대인 1여단(최고사령부 직속부대)과 8총국(인민보안성 소속) 건설부대가 동원되기도 한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한국에서 들여온 아파트나 빌라의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 내부 구조는 처음부터 한국식으로 짓는 경우도 많다. 데일

1 한국 드라마 영향으로 호밀빵을 즐기는 북한 주민이 늘고 있다.
2 북한의 아파트 내부 구조가 한국식으로 바뀌고 있다.
3 '별에서 온 그대' 영향으로 전지현식 화장법이 북한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한류를 통해 남과 북의 문화와 의식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남과 북의 문화적 차이가 줄고 있고, 한국 사회에 대한 북한 주민의 잘못된 인식도 깨지고 있다. 한류가 통일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리NK 평양 소식통은 "평양, 신의주 등 대도시에서 최근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은 기존 국가에 의해 건설된 주택과 달리 창문과 출입문 등 내부 구조가 한국의 주택 구조와 비슷하다. 베란다 창문이 통유리로 되어 있으며, 커다란 거실과 방문턱이 없고 주방 구조는 싱크대 설치가 기본"이라고 전했다.

헤어스타일, 아파트 인테리어까지 영향

한국산 건축 자재로 집을 짓는 사람도 늘고 있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최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내부 장식을 위한 한국 자재와 설비 수요가 늘면서 시장 돈주들은 중국에 직접 주문해 한국산 자재와 설비를 수입하고 있다"며 "한국 상품 수입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한국 상표를 떼고 중국제로 위장해 수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수입되는 한국산 자재 중 도배지 비중이 높다. 고급 아파트에 쓰는 최상의 도배지는 질과 색상이 좋은 한국산 '뽕' 도배지가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다"면서 "한국산 도배지는 중국에서 컨테이너로 신의주 세관으로 수입돼 평양, 신의주 등 대도시로 유통된다"고 설명했다. 한류가 북한 주민의 주거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여성들이 한국 드라마의 헤어스타일을 따라 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최근에는 사업차 중국을 방문한 평양 돈주 여성들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헤어숍에서 파마를 하는 등 한국 문화를 즐기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최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상품 수입 목적으로 중국에 출장 온 평양시 상점 책임자와 지방 돈주 여성들이 귀국 전에 꼭 현지 헤어숍에 들른다"면서 "사장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경계심 없이 찾아와 파마를 한다"고 전했다. 데일리NK 평안북도 소식통도 "한국 문화가 유행하면서 단체 머리 모양이 사라지고 있으며, 기혼이든 미혼이든 본인이 원하는 신식 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깥세상 보는 '창문' 역할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인기를 끌던 시기에는 '전지현식 화장법'이 유행하기도 했다.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소장은 "거의 모든 장마당에서 한국의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누구나 돈만 내면 살 수 있을 정도로 거래됐다"고 말했다. 북한 세관도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글자만 지우면 뇌물을 받고 눈감아주기도 한다.

몇 년 전 탈북한 30대 여성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큰 눈이 부러워 북한의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쌍꺼풀 수술이 크게 유행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류를 통해 남과 북의 문화와 의식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이제 혁명가요와 북한 최고지도자의 우상화 영화를 보는 대신 한국의 드라마와 노래를 들으며 생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남과 북의 문화적 차이가 줄고 있고, 한국 사회에 대한 북한 주민의 잘못된 인식도 깨지고 있다. 한류가 통일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에서 200일 전투가 한창이던 시점에 평안남도 소식통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당국이) 200일 전투를 빌미로 주민들을 숨 돌릴 짬도 없이 몰아붙이는 바람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가 쌓여가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퇴근 후에는 한국 가요를 듣거나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피로를 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드라마와 노래가 북한 주민의 고단한 생활을 위로하고 있고, 고립된 그들이 바깥세상을 볼 수 있는 '창문'이 되고 있다.

북한 주민이 좀 더 많은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가능한 한 빨리, 더 좋은 화질과 음질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북한 주민이 좀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 북한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놓고 북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북한 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이다. NUAC

대표적 후진국병 '결핵' 발생 남한보다 5배 이상 높아

북한은 취약한 영양 상태와 무너진 의약품 공급체계, 열악한 의료 환경 등으로 말미암아 결핵과 B형간염 등 주요 감염성 질환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조속히 대비하는 게 통일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3〕 로동신문 주체105(2016)년 10월 31일 (월요일)

위대한 인민사랑의 결정체로 솟아난 세상에 자랑할만 한 의료봉사기지

류경안과종합병원 개원식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가 여러 나라 당수들을 만났다

계획보다 1만 5천여t의 석탄 증산

특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노동신문에 실린 류경안과종합병원 개원식 기사.

| **신희영** 서울대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소장 |

남북한 보건의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남한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의료제도를 갖추고 있는 반면, 북한은 국가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무상의료를 제도화했다. 무상 의료는 예방의학, 의사담당구역제(호담당구역제)와 함께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자리 잡았으나,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의 경제난이 확산됨에 따라 무상 의료체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장마당과 같은 비공식 시장을 통해 구입하는 상황이며, 북한의 의약품 공급체계는 이미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강점인 무상 의료가 북한 보건의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북한의 의료전달체계는 1~4차로 구성돼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인 리 및 종합 진료소는 6263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다. 하지만 평양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의 의료기관은 식수와 전기 공급 부족으로 원활한 예방 및 치료 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의사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진료시간 외에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하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의료체계는 1차 의료와 정성의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환경이 개선된다면 언제든지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 전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북한 보건성과 WHO에 따르면 북한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3.47명으로 남한(2.26명)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는 의학대학이 아닌 의학전문학교의 3년 과정을 거쳐 양성되는 준의 인력을 포함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타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간호사에 해당하는 북한의 간호원은 남한과 달리 간호원학교에서 6개월 또는 2년의 단기 과정을 통해 양성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북한의 의료 인력은 타 국가에 비해 양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지만 질적인 수준을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한은 무상의료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국과 국제의료단체의 지원이 없으면 의료보건체제가 무너질 정도로 열악하다.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현황은 북한 주민의 건강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5년 북한 성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70.6세로 남한에 비해 11.7세 낮으며, 성인의 주요 사망 원인은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비감염성 질환이 꼽힌다. 또한 결핵과 B형간염 등 주요 감염성 질환 부담은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은 결핵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높은 전 세계 30개국 중 하나이며, 2015년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이 561명으로 남한(101명)보다 약 5배 높다. 특히 북한 주민의 취약한 영양 상태와 무너진 의약품 공급체계는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결핵 퇴치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남북한 통일에 대비해 우선되어야 할 점은 바로 이러한 남북 간 보건의료체계와 질병상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한은 감염성 질환의 패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은 바이러스성 질환이 주를 이루지만 북한은 남한의 1980년대 질병 패턴인 세균성 질환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질병 패턴 차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 없이 통일이 이뤄질 경우, 통일 한반도의 질병 대응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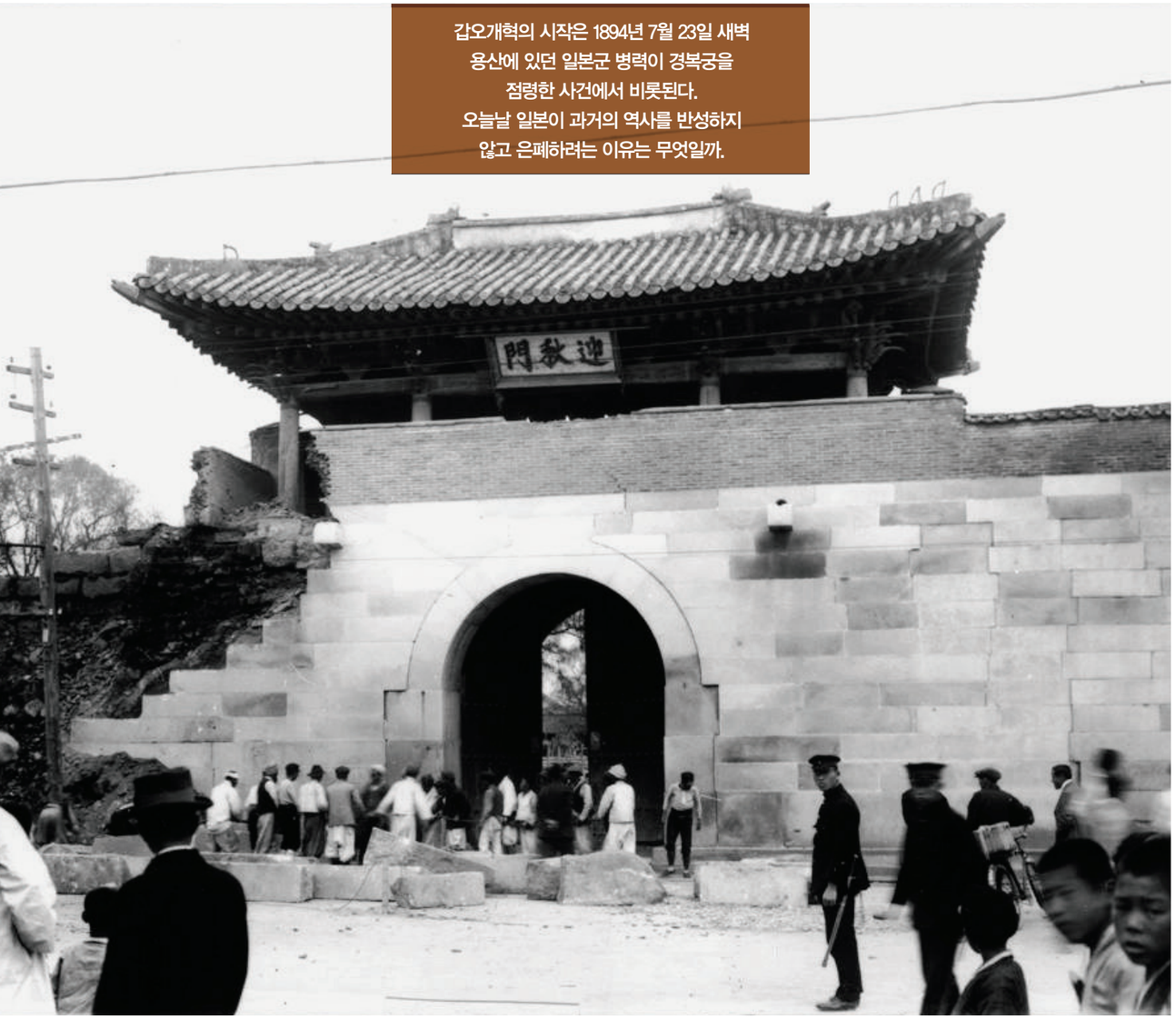
또한 남북통일 이후 이미 오래전 퇴치된 감염성 질환이 재출현한다면 남한 주민들은 해당 질병에 대한 면역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질병의 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 또한 장기간 계속된 영양 결핍과 면역력 부족으로 남한에서는 흔한 바이러스 질환일지라도 쉽게 전파돼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듯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및 질병 패턴과 관련한 현황 파악과 실태 분석은 통일 이후 의료체계의 적합한 전략 수립과 대응책 강구를 위한 선행조건이다. 이를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남북한 교류협력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대북 보건의료 지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나 정치적 갈등과는 무관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나 북한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 지원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 탓에 남한 정부의 대북 지원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즉 '남북한 공동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추진은 북한의 개발 지원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북한 보건의료 실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준비 기반이면서 동시에 통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른 시일 내에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문을 열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NUAC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이 을미사변과 한일합병으로 이어져

갑오개혁의 시작은 1894년 7월 23일 새벽 용산에 있던 일본군 병력이 경복궁을 점령한 사건에서 비롯된다. 오늘날 일본이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은폐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제강점기 경복궁 영추문 모습.

김영수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동해연구실장

성균관대 사학과 석사, 모스크바국립대 역사학 박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 역임. 동북아역사재단 학술상 수상. 저서 〈미쩰의 시기 :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명성황후 최후의 날〉 등

1894년 7월 23일 일본 군대의 '경복궁 침입사건' 이후 일본은 자국에 유리한 갑오내각을 조직하면서 갑오개혁을 추진했다. 일본은 1894년 6월 청(淸)과의 대치 국면에서 조선의 농민반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정 개혁이 필요하며 일청 양국의 공동간섭론을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청과의 전쟁 준비를 서둘렀다. 일본군을 지속적으로 파병해 1만 명의 병사와 9척의 병선을 인천에서 서울까지 배치했으며, 요충지에 행영(行營)과 포대를 구축해 전쟁 발발에 대비했다.

일본은 일청 양국의 공동간섭론이 실현되지 못하자 독자적으로 조선 정부에 내정 개혁을 강요했다. 1894년 6월 30일 주한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스케 공사는 외무독판 조병직과 면담하면서 조선의 독립과 속방 문제를 꺼냈다. 이는 사실상 조선의 내정 개혁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조선 정부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전쟁 발발에 협조할 수 있는 정권을 설립하려는 것이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자주국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 했다. 그러나 1894년 7월 3일 오토리 일본공사는 두 번째 제안으로 내정 개혁 방안의 세목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개혁 안건을 강요했다. 오토리 일본공사는 7월 19일 조선 정부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일본은 우선 서울~부산 간 전신선 가설에 착수했으며, 병영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과 중강통상장정(中江通商章程) 및 길림통상장정을 폐기하라고 조선 정부를 압박했다.

일본 군대의 경복궁 침입

1894년 7월 23일, 그날의 상황은 이랬다. 일본군은 23일 새벽 용산에 있던 1000명의 병력을 경복궁으로 진군시켰다. 일본은 '그쪽에서 먼저 발포'해서 이에 맞서 싸워, 일본 군대가 조선 군대를 물리치고 성문을 열고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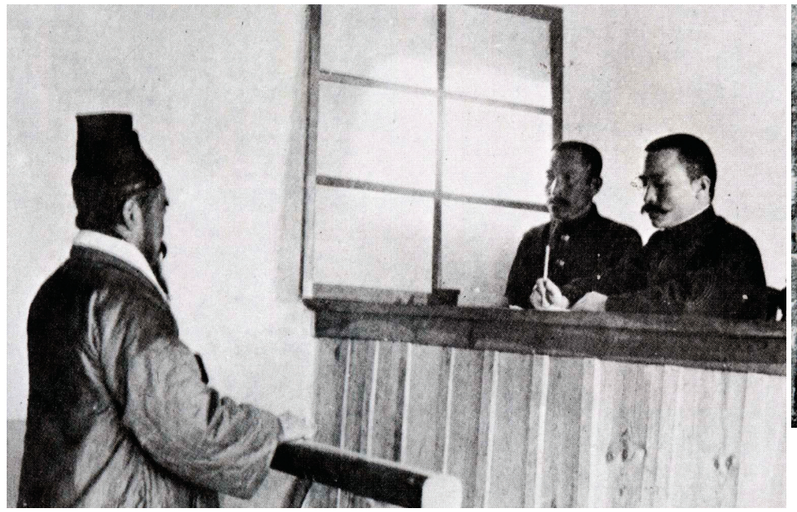
서대문 밖 아현에 주둔한 일본군 보병 21연대 제2대대는 소좌 야마구치 게이조의 지휘 아래 23일 새벽 3시 30분 행동을 개시했다. 2대대는 서대문을 거쳐 경복궁 서쪽 영추문으로 향했다. 일본군은 영추문에 도착해 공병소대를 통해서 다이너마이트로 대문을 파괴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대문이 견고해 폭파는 실패했다. 다급해진 일본 군대는 도끼로 대문을 파괴하려 했지만 또다시 실패했다. 결국 일본 군대는 긴 장대를 벽 꼭대기에 걸치고 벽을 넘어갔다. 새벽 5시경 안과 밖에서 톱으로 빗장을 절단하고, 도끼로 대문을 부수고 겨우 영추문을 열 수 있었다.

영추문 진입 후 제2대대 7중대는 함성을 지르며 곧바로 광화문으로 나아가 수비하는 조선 병사를 쫓아내고 광화문을 열었다. 그다음 동쪽 건춘문으로 나아가 안에서 문을 열었다. 건춘문을 통해 들어온 제2대대 6중대는 북쪽 춘생문, 신무문 등으로 진격했다.

춘생문으로 향하던 6중대가 대궐 북부 외곽에 이르자 북쪽 소나무 숲에서 조선군이 사격을 개시했다. 북쪽에서 격렬한 총성이 벌어지자 5중대도 즉시 건춘문에서 성벽 안쪽을 따라 북진했다. 5중대가 지원하자 처음에 6중대에 맞서 저항하던 조선군은 북쪽 대궐 성벽을 넘어 북한산 방향으로 도피했다. 오전 7시 반경 양쪽의 충격이 멈췄다.

전투가 시작되자 고종과 명성황후는 경복궁 옹화문 안 함화당에 있었다. 7칸 건물로 팔작지붕 형태였던 함화당은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장소였다. 이때 외무독판 조병직은 오토리 공사와의 대화를 요청해 옹화문 안에서 회담을 진행했다. 그런데 대대장 야마구치는 옹화문 안에 있던 조선 병사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오전 9시경 옹화문 주위에 일본 초병을 배치해 경계하게 했다.

어쩔 수 없이 고종은 1894년 함화당에서 총리대신과 궁내부대신, 각 아문 대신을 접견하고 갑오개혁을 발표했다. 일본은 1894년 7월 23일 경복궁을 강제 점령함으로써 조선의 정국을 전환시켰다. 일본은 조선 정부를 붕괴시키고 청일전쟁에 협조할 수 있는 친일 정권을 탄생시켰다.



갑오개혁 후 만들어진 신식 재판정 풍경(왼쪽). 갑오개혁 후 신식 군인 복장.

사실 1894년 일본의 경복궁 점령사건을 실제로 지시한 인물은 일본 외무대신 무쓰 무네미쓰였다. 주한 일본공사 오토리는 일본에 일시적으로 귀국했다가 1894년 6월 다시 한국에 귀임했는데, 그때 무쓰는 "시국이 급박해 본국 정부의 훈령을 받을 여유가 없게 되면 공사의 재량으로 임기처분하라"는 훈령을 귀국하는 오토리 공사에게 내렸다. 그 후 일본이 청국과의 중재에 실패하자 무쓰는 1894년 7월 12일 "지금 시점에서는 단연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구실을 찾아서라도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훈령을 오토리 공사에게 직접 보냈다.

대원군 은퇴와 군국기무처

일본 군대의 경복궁 침입 당시 대원군은 주한 일본공사 오토리와 함께 참여했다. 사건 직후 고종은 대원군에게 모든 서무와 육군 및 해군의 사무를 전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 그런데 오토리의 후임 주한 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는 조선과 일본의 중요한 외교 사건에 깊숙이 관여해 조선 문제에 정통한 인물이었다.

청일전쟁 이후 조선의 보호국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자 그는 1894년 10월 28일 조선에 특명전권공사로 파견돼 조선 내정에 개입했다. 1894년 11월 이노우에는 군국기무처의 개혁정책을 반대하는 대원군을 정계에서 강제로 은퇴시켰다. 1895년 6월 일본 정부는 이노우에 공사에게 귀국을 명령했고, 이노우에는 자신의 후임으로 육군 중장 미우라 고로를 공사로 추천했다.

군국기무처의 설립은 경복궁 점령을 통한 일본의 개입이라는 사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1894년 7월 26일 새로이 군국기무처의 처소가 정해지면서 총재에 김홍집이 임명됐다. 군국기무처는 국정 전반에 걸쳐 개혁을 수행하는 기구였다. 중앙의 행정·사법기구를 비롯해 국정 개혁 및 식산흥업 등 모든 군국 사무를 담당하는 의결 기구로 활동했다. 군국기무처의 회의는 회의원 반수 이상이 참가하였을 때 개회할 수 있었으며, 토의 사항은 가부의 다수에 따라 결정하는 다수결의 방식을 따랐다. 결정된 안건은 왕의 비준을 받아 집행하는 방식을 따랐다.

일본 군대의 경복궁 침입사건 이후 고종은 일본의 감시를 받으면서 신변 불안에 시달렸다. 최고 권력자 고종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 상처는 고종의 심야 집무와 연결됐다. 일본인들의 활동을 궁궐에서 감시하기 위해, 고종은 서울 주재 러시아공사 베베르, 미국공사 존 실, 미국인 고문관 클레어런스 그레이트하우스의 조언에 따라 외국인을 경복궁에 상주시켰다. 다름 아닌 미국인 군사고문 윌리엄 다이 장군과 닌스테드 대령, 러시아 건축가 세레진 사바친 등이었다. 그중 사바친은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의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외국인이 됐다.

1894년 7월 23일 경복궁을 강제 점령한 일본은 고종으로 하여금 갑오개혁을 발표하게 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조선 정부를 붕괴시키고 친일 정권을 탄생시켰다.

경복궁 침입사건과 을미사변

그런데 1894년 7월 23일 일본 군대의 경복궁 침입사건은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의 전개 과정과 매우 유사했다. 두 사건 모두 주재국의 급박한 상황에서 주한 일본공사에게 판단의 재량이 주어졌다. 또한 주한 일본공사가 정변에 개입할 명분을 찾으면서 적극적으로 정변을 주도하고 일본 군대를 동원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일본공사관 서기관 스기무라가 정변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작성했고, 일본 육군대위 출신 오카모토가 대원군을 설득해 입궐시키는 임무를 담당했다. 두 사건의 구상과 인물이 모두 외무대신 무쓰의 위기 대응 시나리오에서 비롯됐다.

근대 이후 일본은 정권의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하고 국내의 불만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웃나라들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일본은 국제 정세가 긴장 구도이고, 한국의 자주독립이 취약하면 언제든지 한국을 침략했다. 우리가 1894년 7월 23일 경복궁 침입사건,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 등의 참혹한 역사를 똑똑히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NUAC

일본군이 경복궁에 난입하는 모습을 그린 일본의 원색 판화첩.

마술쇼·콘서트·학부모 모임… '동네 문화공간'으로 정착

창업 1년 만에 인천 산곡동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카페가 있다.
레드오션이라는 카페 창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꿈을 실현한 탈북민 유진성 씨를 만났다.

한적한 아파트촌 사이에 위치한 카페 '카작 산곡점'은 탈북민 유진성(31) 씨가 누나 순애(37) 씨와 함께 운영하는 공간이다. 2015년 겨울에 문을 연 이곳은 콘셉트의 변화를 여러 번 꾀하다 현재는 콘서트, 마술쇼, 학부모 모임 등이 열리는 동네 전용 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북카페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듯 책장에 꽂힌 넉넉한 책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카페 슬로건이 '우리 동네 문화공간'이에요. 동네 주민들도 카작이란 이름보다 우리 동네 문화공간이라고 더 많이 불러주세요. 입시설명회는 기본이고 요즘처럼 새 학기가 시작되는 무렵엔 학부모 모임이 많이 열려요. 애초에 카페로 창업했지만 문화공간으로 바뀐 것이 오히려 더 잘된 것 같아요. 주민들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니까요."

지금은 주민들이 애용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오픈 당시엔 텃세도 적지 않았다. 일부 주민들은 다짜고짜 찾아와 "카페 창문을 통해 우리 집이 들여다보이니 불편하다"며 영업 방해를 하기도 했다. 경찰까지 찾아왔을 만큼 골치를 썩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일도 잦아들었다. 유 씨의 적극적인 홍보와 진실성이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전단지도 돌리고, 아파트 게시판이나 온라인 블로그에 광고도 하고, 동네 상점 문도 일일이 두드리며 열심히 홍보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이 늘었죠. 지금은 그 손님들 대부분이 단골이 됐어요."

탈북 남매가 운영하는 카페인 만큼 언론의 관심도 끊이지 않는다. 독일, 미국 등 해외 매체에서도 찾아올 정도다.

"인터뷰를 하고 나면 이런 말을 해주는 기자 분들도 있어요. '당신들이 (남한 사회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보람을 느껴요."

현재 '카작 산곡점'은 프랜차이즈 분점의 꼬리표를 떼고 유 씨 남매의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바뀌었다. 유 씨는 카페 한쪽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을 이용해 중국을 상대로 한 작은 유통업(비즈삼퍼센트)도 겸하고 있다.

"남한 사회에서 탈북민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다가 대중국 무역을 떠올렸어요. 북한에 살 때 중국을 오갈 일이 많았기 때문에 중국말에 익숙한 편이거든요. 한국에서도 틈틈이 중국을 오가며 거래망을 개척했고, 지금은 중국 바이어들을 상대로 화장품과 의류 등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편견과 차별은 걸러 듣고, 당당히 자기 몫 찾아 나서야

유 씨의 성공적인 창업은 발로 뛴 준비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탈북 2년 만인 2011년 세종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유 씨는 정부 및 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창업 아카데미를 찾아다니며 창업 기회를 모색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창업 아카데미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고려대가 주최하고 JP모건이 후원하는 '탈북민 창업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해당 프로그램을 수료한 뒤 10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아 카페를 창업했어요."

유 씨는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을 떠올리며 "얻은 게 참 많다"고 강조했다. 북한에서 이미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한 그는 남한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학사과정만 두 번 밟았다.

"탈북 초기에 북한에서 공대생이었던 이력을 살려 한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당시 자동차 공법 설계 일을 했는데, 같이 일하는 분들의 스펙이 워낙 대단한 데다 텃세도 심해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죠. 결국 제가 (남한 사회에서)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분야가 뭔지 찾기 위해 두 번째 대학 진학을 결심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남한에서의 첫 대학 생활은 말 그대로 '문화 충격'이었다.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열린 자세는 그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전까지 대기업과 공사장 막일을 하며 탈북민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확인했어요. 여기는 내 땅이고 너는 이방인이다,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식의 말들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달랐어요.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었죠. 거기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여기서도 내 갈 길을 찾을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생겼죠. 그때 만난 친구들과는 지금까지도 고향의 죽마고우 못지않게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올해로 탈북 9년째를 맞은 유 씨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정착 초기와 비교하면 지금은 마음에 한층 여유가 생겼다고 말한다.

유진성 씨가 민주평통 강남구지회에서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탈북 청년'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전에는 탈북민에 대한 편견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편견은 못 가진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자인 사람들을 찔러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안됐다고 생각해요."

유 씨는 탈북민이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로 사상의 차이를 언급했다. 이 때문에 남한 사회에 적응하려면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탈북민들은 유일사상 체제하에서 수십 년을 세뇌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목소리 하나하나에 완벽하게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죠. 물론 기본적인 부분들은 맞춰가야 하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맞추려고 하면 본인만 힘들어져요. 탈북민을 향한 일부 차별적 발언이나 편견은 적당히 걸러 듣고, 빨리 자기 몫을 찾아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NUAC

南강원과 北강원이 하나 되면 강원 산골이 글로벌 관광지로 우뚝

강원도에 통일은 분단된 강원도의 통일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값진 기회다. 강원지역회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러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고 강원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무모하게 시작한 일이었다. 처음엔 강원 도내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례를 찾아보자는 '아이디어'일 뿐이었다. 일단 부딪쳐보자 해서 알아보니 5쌍이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강원지역회의 차원에서 진행하기엔 다소 무리였다. 그때 어떻게 알고 왔는지 강원여성위원회 자문위원들이 가세했다. 자문위원들은 며느리와 사위를 얻는다는 마음으로 직접 결혼식을 준비했고, 동네 주민들은 새 이웃을 맞는다는 기쁨으로 축하했다.

온정의 손길도 이어졌다. 뜻깊은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지역에 퍼지면서 동네 웨딩홀이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유명 리조트는 숙박권과 자유이용권을, 향토기업에선 주류를 후원했다. 특산물, 화장품, 이불을 후원하는 이들도 있었다.

지난해 강원지역회의와 강원여성위원회가 기획한 '북한이탈주민 행복누리 합동결혼식'이 6개월의 준비 끝에 그해 11월 10일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열렸다. 결혼식에는 박용성 강원지역회의 부의장과 자문위원들을 비롯해 도내 주민 200여 명이 하객으로 참석해 탈북민 5쌍의 앞날을 축복했다. 비로소 부부로서 백년가약을 맺는 순간이었다. 합동결혼식을 직접 기획한 박용성 부의장이 벅차하면서 말했다.

"그날 결혼식장이 눈물바다였어요. 신랑신부들이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났는지 펑펑 울더군요. 하객들은 억압과 고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의지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온 이들의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주례를 보던 저도 만감이 교차해서 눈시울이 뜨거웠죠. 이들을 보면서 고귀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0일 강원지역회의 주최로 합동결혼식이 열려 탈북민 5쌍이 화촉을 밝혔다.

산골 평창에서 개최되는 평화올림픽

강원도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이자 세계 유일의 분단 도(道)이다. 과거 수복지역이었던 강원 속초와 고성엔 고향이 이북인 도민들이 적지 않다. 그런 면에서 강원 도민에게 통일은 누구보다 중요한 민족의 과제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곧 강원도의 통일인 셈이다.

"통일과 북한에 대한 강원 도민들의 여론은 복합적입니다. 안보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면서도 평화통일을 강렬히 열망하죠. 분단의 경계에 있다 보니 북한의 도발과 한민족으로서 공존, 평화에 대한 상념이 교차하는 겁니다."

강원 도내에는 북한과 통일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다. 지역이 워낙 넓은 데다 산골이다 보니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강원지역회의가 직접 움직여 자문위원 연수, 평화통일포럼, 통일 아카데미 등을 개최한다.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강원도는 한반도를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금강산과 설악산을 벨트로 하는 세계 최고 관광지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도 급증할 것이란 게 박 부의장의 생각이다.

"강원 도민이 약 150만 명(2016년 기준)인데, 북(北)강원도민이 약 17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통일이 되면 강원도 인구가 320만 명을 넘어설 거예요. 한반도에서 강원도의 세(勢)가 커지는 것은 물론 인구까지 확보한 강력한 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해요. 강원도는 통일 이후 청사진이 확실해어느 지역보다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대단합니다."

최근 강원지역회의는 중요한 책무를 맡았다. 2018년 강원도 깊은 산골 평창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다. 강원 도내 자문위원들은 올림픽 자원봉사 활동과 서포터스 회원으로 적극 참여하며 올림픽 붐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엔 평창동계올림픽 '평화의 벽' 건립 사업을 위해 민주평통 강원 도내 18개 시·군 간부위원 100여 명이 1인당 5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며 동참했다. 5월엔 강원지역 간부위원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특색 사업도 마련했다. 강원지역회의는 2015년부터 매년 '이승복 추모 전국 웅변대회'를 개최해왔다. 올해부터는 이 대회를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국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제1회 이승복 추모 전국 웅변대회가 개최될 때만 해도 박 부의장이 자비로 진행할 정도로 재정이 여의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회를 맞은 대회는 전국에서 452명이 웅변 원고를 제출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올 5월에는 대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승복사업기념회가 발족될 예정이다.

"과거에는 이승복이 안보의 아이콘이었지만, 최근엔 평화의 아이콘으로 활용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평화의 성지가 강원 산골 평창에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생각입니다. 실제로 88서울올림픽이 개최된 다음 해인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독일이 통일됐잖아요. 평화통일의 기운을 이어받으면 우리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한반도가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강원 지역도 세계적인 명성과 경쟁력을 지닌 지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겁니다." NUAC

“태권도 외교로 친한파 확보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큰 역할”

글로벌 시장의 마지막 성장 보고(寶庫)로 불리는 서남아 지역은 남북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할 ‘신영토’로 꼽힌다. 서남아협의회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및 구제활동 등 공공외교를 적극 펼치고 있다.

서남아 지역이 전 세계를 잇는 중요한 교역 요충지로 떠올랐다. 냉전 종식 이후 한때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약화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흐름을 주도할 ‘신영토’로 평가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서남아 지역의 맹주국인 인도의 경우 지난 10년간 연평균 6% 이상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전 세계 컨테이너 물량의 반 이상이 지나가는 인도양 관문에 위치한 스리랑카와 잠재력이 풍부한 미얀마는 놓칠 수 없는 신흥시장으로 꼽힌다.

이기수(44) 서남아협의회 간사는 남북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서남아 지역이 갖는 의미를 끊임없이 강조했다.

“서남아 지역은 글로벌 시장의 마지막 ‘보고’입니다. 국제사회의 눈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죠. 세계가 주목하는 이곳에서도 남북 평화통일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답니다.”

서남아협의회는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등 9개국 자문위원 85명이 활동한다. 향후 글로벌 교역 요충지가 될 서남아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평화통일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각국 인사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처음 스리랑카에 왔을 때만 해도 서남아 지역의 한국 교민들은 평화통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통일에 대한 교민들의 관심이 큰 건 아니지만 과거보다 한국 교민과 서남아 지역의 군·경찰 고위급 인사들이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쏟아지고요.”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은 서남아협의회가 서남아 지역 주재국민과 한국 교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통일 사업을 꾸준히 추진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 2월 인도지회는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초청해 현지인들과 대북정책 공감대를 조성했고, 방글라데시지회는 자문위원들의 노력으로 비(非)인권으로 논란이 됐던 북한 식당을 철수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각 지회별로 통일 강연회와 통일 음악회, 통일골든벨, 북핵 규탄대회, 인권 사진전 및 동영상 상영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동포사회의 통일 의지를 키웠다.

1

2

1 서남아협의회 자문위원들이 태국 참전용사촌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2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통일 음악회.

공공외교 통해 재외동포 역량 결집

서남아협의회의 ‘공공외교’ 전략도 주효했다. 공공외교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매력을 널리 알려 외국 국민들을 친한 세력으로 만드는 것. 이를 위해 서남아협의회는 한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적극 활용한다. 실제로 요즘 스리랑카에선 태권도 바람이 거세다.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한 후 국제대회 심판으로도 활동하는 이기수 간사는 “태권도는 적은 자본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공공외교 자원”이라고 평가했다.

“스리랑카가 신흥국가로 떠오르면서 여러 나라의 해외원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 상당한 금액을 들여 정부 청사, 병원, 방송국 건물 등을 짓고 있죠. 그에 반해 한국은 태권도로 스리랑카 군·경찰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 한국의 공인정신(公人精神)을 심어줍니다. 개인 심신 단련은 물론 국가 안보와 교육에까지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태권도를 매개로 구축된 한국과 스리랑카 간의 네트워크는 서남아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힘이 될 겁니다.”

한반도 통일과 안보는 미래 세대가 이뤄야 할 숙원 사업이다. 미래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것이 곧 국가적 사명인 셈이다. 이런 뜻을 받들어 서남아협의회는 지난 2년간 차세대 통일 리더를 육성하는 데 주력했다. 미얀마지회가 민주평통 최초로 ‘주니어 평통 위원’을 위촉하고, 스리랑카지회가 스리랑카 한인학교 주관으로 청소년 평화통일 글짓기 및 태극기·한반도 지도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 것은 그 결과물이다.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더욱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환경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재외동포들의 협력과 화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기수 간사가 “재외동포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력이자 외교력의 일부”라고 말하는 까닭이다.

“재외동포는 국력의 연장선이고, 모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입니다. 통일을 위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려면 재외동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결집한다면 남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NUAC

민주평통이 주최하고 일본 긴키협의회가 주관한 2017 한일 평화통일포럼.

"북한 핵은 동북아의 공동 위협, 긴밀한 협력 속에 대처 방안 마련해야"

북한이 올해 2월과 4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4월 14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포럼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억제를 위한 해법을 논의하고, 한일 양국이 과거사와 영토 갈등을 뛰어넘어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한일 양국 간의 과거사와 영토 관련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지역 안보 공조체제가 약화되거나 발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민주평통 주최로 4월 14일 일본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오사카 부본부에서 열린 '2017 한일 평화통일포럼'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한국과 일본은 현재 북한 핵·미사일이라는 공동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한 뒤 그 어느 때보다 대북, 대중 문제에 관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토대로 ▲실시간 실질적인 군사정보 교류 ▲보호체계를 가동할 수 있는 연락단 상설 배치 ▲양국 군사연습 및 훈련 상호 개방과 참관 정례화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공격받을 경우에 대비한 통합 방어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권 사무처장은 이어 "한일 양국의 공조로 북한 핵·미사일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이룬다면 국방,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그 힘이 발휘될 것"이라며 "나아가 오랜 갈등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제1세션 패널로 참석한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도쿠치 히데시 정책연구대학원대 수석연구원, 권태환 국방대 교수, 쓰야 히사시 NHK 해설위원은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큰 공감대를 표현했다. 이들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방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의견을 나눴다.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와 국제 공조'를 주제로 열린 제1세션에서는 홍규덕 숙명여대(정치외교학)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 대북 및 대중 문제에 관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억제 방안 미흡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강 부원장은 "북한 핵·미사일 능력 향상으로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원장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감행한 미사일 시험발사 결과를 보면 미사일 개발 속도(사거리, 정확도, 연료 종류)가 예상보다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억제전략의 목표는 북한의 도발을 예상하고 도발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추가 도발을 막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가 구축돼 있지 않은 데다 예방적, 방어적 공격 능력이 매우 미흡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북한 지역을 24시간 실시간 감시하는 정보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돼 있지 않아 한국 정부가 제시한 북핵 대비 3축 체제, 즉 선제공격형 방위 시스템(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 시스템(KMPR)과 같은 대응책으로는 대북 억제 전략과 구도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북 억제 방안과 관련해 "중국의 협조와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중국을 움직이게 할 방안으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제재)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도쿠치 히데시 수석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정부와 북한의 관계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진단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불투명하다"면서 "미국의 정책적 공백을 틈타 북한에 의한 예측 불허 사태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데, 미국이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럼 후 다과회를 하며 환담을 나눈 참석자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준학 민주평통 여론분석과장, 김성대 16기 근기협의회장, 최철호 오사카총영사관 영사,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권태환 국방대 교수, 이용권 근기협의회 상임위원,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 쓰야 히사시 NHK 해설위원, 토쿠치 히데시 정책연구대학원대 수석연구원, 허근일 민단 중앙본부 부단장,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 정현권 민단 오사카부 본부단장, 오공태 일본 부의장,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 권오일 17기 근기협의회장, 이즈미 하지메 도쿄국제대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기무라 칸 고베대 교수, 히라이와 순지 나고야남산대 교수.

도쿠치 수석연구원이 말하는 북핵에 대한 대응 기본은 외교, 제재, 억제의 적절한 조합이다. 그는 "북한에 대해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하기에 제재와 억제는 예전보다 더욱 필요하다"며 "특히 억제체제가 확고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북 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권태환 교수는 한일 양국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권 교수는 "미국과의 연합 방위체제를 안보의 기축으로 삼고 있는 한국과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급변사태나 한반도 도발 시 군사적 위협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북핵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에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쓰야 히사시 해설위원은 "미국 트럼프 정권은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그 선을 넘을 경우 트럼프 정권이 어떤 행동을 할지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운명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일본 내에서 거론되는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현재 보유한 장비로도 타국 영토를 선제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만약 일본이 '적(敵) 기지 공격 능력'을 갖게 된다면 그 시비를 둘러싼 격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이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 있을 때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등의 공격 무기를 뜻한다.

실추된 한국의 외교 신뢰 회복해야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 전환기 관리'를 주제로 이즈미 하지메 도쿄국제대 국제전략연구소 교수가 토론을 이끌었다. 첫 발제자로 등장한 기무라 칸 고베대 교수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한국의 진보 세력이 지금까지 가장 중시해온 것이지만 유엔의 엄격한 제재가 가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에 융화정책을 취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박근혜 정권이 소위 자유분방하고 활발한 외교정책을 취하면서 결국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외교적 선택지를 제한시켜버렸다"고 진단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2013년 박근혜 정권 출범 당시 미·중 양국의 대립이 오늘날만큼 심각하지 않았지만 2014년 무렵 남중국해 문제로 미·중 간의 대립이 격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중국 중시 정책을 지속하면서 미국의 분노를 샀고, 미국이 중시하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외교적으로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그 결과로 사드 배치와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를 이어갔고 결국 한국 정부는 주변국의 압력을 받아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게 됐다. 결국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자국 외교를 위한 카드를 잃었다는 것이 기무라 교수의 평가다.

그는 또 한국 차기 정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박근혜 정권 때 실추된 한국 외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자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선택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한일 정치권 간의 '역사 과민'을 둘러싼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정치권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재개정을 주장할 경우 일본은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위반했다며 공세를 펼치는 등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바람직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으로는 '제3기 역사공동위원회 발족'을 꼽았다. 진 소장은 "한일 공동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교육과 언론이 활용해 양국이 역사적으로 화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인 문제나 복지 문제 등 한일 양국의 공통된 사회문제에 대해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및 대중 대비 차원서 한일 협력 필요

토론자로 참석한 히라이와 순지 나고야남산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이 북한과의 교섭에 응하지 않도록 하려면 미국 측에 한일의 입장을 알리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단순히 북한 도발을 대비하는 차원일 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한일 양국의 생명선인 해상수송로가 지나가는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며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향력 확대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중국이 보유한 250여 개 핵무기 중 150여 개가 탄도미사일에 장착돼 있어 이에 대한 한일 공조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게 김 논설위원의 주장이었다.

한편 재일동포의 수도 오사카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한자리에서 만나기 힘든 한일 학계 및 정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개회사를 맡은 권오일 민주평통 일본 긴키협의회장은 "이번 포럼은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간 국가 안보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논의가 이뤄져 시의적절한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오공태 민주평통 일본부의장도 축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NUAC

문화·체육 통한 통일 공감대 확산 '청년층 통일의식 제고' 모색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이지만, 통일 준비를 게을리할 수는 없다. 민주평통은 3월 29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교육과 문화·체육 분야 직능대표 자문위원 450명을 대상으로 정책회의를 열어 심층토론을 벌이고 통일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2017년 제1~3차 직능별 정책회의를 대전에서 개최했다. 교육, 문화·체육 직능을 대표하는 전국 자문위원 약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층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교육)', '문화·체육 분야 활용을 통한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문화·체육)'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 1일 차에는 통일 토크콘서트와 분임별 정책회의, 2일 차에는 통일 특강 및 분임토의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통일 토크콘서트에 패널로 참여한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관계 현안 및 직능별 관련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3월 31일에 진행된 2차 정책회의에서는 권태오 사무처장이 '통일정책의 현주소와 향후 추진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권 사무처장은 "북한 핵실험 등으로 불안한 동북아 정세와 미 트럼프 정부의 북핵 강경 기조 등을 고려해 북핵 위기에 대한 올바른 안보의식을 갖고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3차에 걸쳐 진행된 통일 토크콘서트에서 김갑식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통일의식 제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은 한반도 평화와 공영의 주체이자 통일한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해나갈 세대"라며 "현행 통일교육 체계 쇄신, 통일 친화적 담론의 개발 및 확산, 통일교육 강화, 민관 협업을 통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남북 접촉을 통한 청년층 통일의식 제고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 통일부,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통일교육개혁위원회(가칭)' 설립·운영이 필요하고,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을 추진해 학교 통일교육, 사회 통일교육, 통일 준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일만 달성되면 한반도 문제가 모두 해소될 수 있다는 통일지상주의에 대해서는 자유·민주·복지 이념이 구현된 '보편가치적 평화통일론'으로 대응하고, 경제 침체, 일자리 부족 등에 기대는 '과도한 통일비용 부담론'에 대해서는 '통일편익론'으로 대응하는 등 부정적, 소극적 통일 담론 대신 긍정적, 적극적 통일 담론 콘텐츠를 개발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경험적으로 북한 방문 및 남북 교류를 더 많이 체험한 청년층이 그렇지 않은 청년층에 비해 통일 문제에 더 열성적"이라며 "다양한 남북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남북 청년의 접촉을 활성화하고 이들의 교류와 수련을 위한 '통일코리아미래연수원(가칭)'을 비무장지대(DMZ), 개성공단, 판문점 등에 설치해 남북 청소년들이 당위적 통일이 아닌 실질적 통일을 인식하게끔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오 사무처장은 직능별 정책회의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북핵 위기에 대한 올바른 안보의식을 갖고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IT 접목한 융합형 통일 사업 필요

통일 토크콘서트의 또 다른 패널인 강동완 교수는 한류와 장마당 세대의 등장 등 북한 사회의 변화를 예로 들며 '문화로 여는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통일을 위해 남북한 주민들의 경계를 허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통일·문화·정보통신기술(IT)이 접목된 융합형 통일 사업 추진, 지역 특화 콘텐츠를 활용한 통일 공감대 확산, 북한 내 한류 문화 확산 등 문화·체육 분야를 통한 대상별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통일의 미래상을 가상현실(VR)로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통일미래체험관(가칭)'을 건립하고, DMZ에 조성될 세계평화생태공원 및 유라시아철도 등을 VR로 구현함으로써 통일 편익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게 구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강 교수는 "6·25전쟁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에는 6·25전쟁 임시수도 기념관, 유엔기념공원,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구 피난민촌, 근현대역사박물관 등이 근거리에 위치하는 등 통일 문화 콘텐츠가 풍부하다"며 "기존의 수도권 중심 통일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의 콘텐츠를 접목한 사업을 발굴해 새로운 방식의 통일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크콘서트가 끝난 뒤에는 직능별로 특화된 주제로 분임토의가 진행됐다. 교육, 문화·체육 직능별로 자문위원들이 6개 분임으로 나뉘어 활기찬 토론을 이어나갔다.

2일 차에 마련된 통일 특강에서는 '북한을 알면 통일이 보인다'를 주제로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 '자유통일은 우리의 숙원'을 주제로 안명철 엔케이워치 대표가 특강을 진행해 북한 실상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NUAC

제140차 운영위원회 개최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등 심의

제140차 운영위원회(위원장 유호열 수석부의장)가 4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사무처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17기 마지막 운영위원회의인 이번 회의는 2017년 상반기 주요 업무현황 보고,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민주평통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지역회의 운영 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심의·의결된 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아세안지역회의에 소속되어 있던 모스크바·블라디보스톡협의회가 유럽지역회의로 소속을 변경하게 됐다. 또한 서남아협의회 소속 4개국(미얀마·라오스·태국·캄보디아)과 베트남협의회를 합해 동남아서부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 종료 후에는 운영위원회 소속 자문위원 25명이 하나원을 방문해 시설 견학과 함께 탈북민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2017 권역별 자문위원 연수
자문위원 통일 준비 역량 강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여건 조성과 자문위원들의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시작된 2017 자문위원 연수가 4월 4일 강남지역 3개 협의회를 시작으로 경북지역회의(4월 6일), 강원지역회의(4월 11일), 광주지역회의(4월 12일), 전북지역회의(4월 13일), 인천지역회의(4월 21일) 등 권역별로 계속됐다.

이번 자문위원 연수는 급변하는 국제 환경과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동북아 안보 환경과 국제질서 ▲북한 핵실험과 김정은 정권 ▲통일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사는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차두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양욱 한국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 등 통일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나섰다.

또한 북한의 실상과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탈북민들이 참여하는 통일 콘서트도 함께 진행해 북한 주민들의 실상, 탈북 과정과 남한 정착에 대한 이야기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이번 권역별 자문위원 연수는 오는 5월까지 지역회의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권법제분과위원회
제3차 북한인권전략회의 개최

민주평통 인권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제성호)가 주최하는 제3차 북한인권전략회의가 4월 24일 오후 3시 사무처 회의실에서 인권법제분과위원회 소속 자문위원과 북한인권 관련 NGO 기관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북한인권전략회의에서는 '신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이광백 통일미디어 대표가 발제하고 참석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철환 대표는 발제를 통해 "오늘날의 북한은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위해 당과 군의 고위 관료들까지 고사포로 처형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에 대한 교육적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광백 대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북한인권법'이 제정 됐지만 아직까지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들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북한 인권 피해자 청원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 후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은 물론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과 탈북 후 중국 등 제3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권유린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북한인권전략회의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계기로 정부와 NGO 간의 효과적인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처음으로 개최됐다.

유호열 수석부의장
북한연구학회와 대학생 통일동아리 지원 업무협약 체결

민주평통 운영위원회(위원장 유호열 수석부의장)는 지난 4월 21일 오후 6시 이화여자대학교 이삼봉홀에서 북한연구학회(학회장 김석향 이화여대 교수)와 '대학생 통일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자문위원과 북한연구학회 소속 교수와 학생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업무 협약은 대학생 통일 동아리의 활동 지원을 통한 청년층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민주평통과 북한연구학회는 ▲통일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 협력 ▲청년층 통일 여론 형성과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 개발과 홍보 협력 ▲기타 상호 간 업무지원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학생 통일 동아리 활동을 돕기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대학생 통일 동아리의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주평통은 대학생뿐 아니라 청년층 모두가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 지도자 통일 공감 좌담회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 등 논의

지역사회 여성의 통일담론 형성과 여성 통일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 지도자 통일 공감 좌담회’가 4월에도 계속됐다. 4월 3일 옥천군과 서대문구협의회를 시작으로 익산시협의회(4월 5일), 무안군·부안군·광산구협의회(4월 6일), 남원시·울산 남구협의회(4월 10일), 증평군협의회(4월 12일), 수원시·공주시·가평군협의회(4월 13일), 칠곡군·마포구협의회(4월 14일), 진천군협의회(4월 18일), 논산시협의회(4월 19일), 보은군협의회(4월 20일), 용인시·함양군협의회(4월 21일) 등에서 개최됐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여성 자문위원과 지역 여성단체 회원 등 20~3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탈북민과 북한·통일·외교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함께 통일 준비를 위한 여성의 역할, 여성 지도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연에 나선 북한·통일·외교 분야 전문가들은 ‘통일 비전과 여성의 역할’, ‘한반도 정세 변화와 중국’ 등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탈북민 강사는 ‘북한 여성의 삶과 제2의 인생’이라는 주제로 북한에서의 여성의 삶, 자신의 탈북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통일 좌담회가 통일 문제와 한반도 정세, 남북한 실상을 파악하고 지역 사회 여성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여성 지도자 통일 공감 좌담회는 지역협의회별로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주제 발표와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 등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 진주시협의회

대학생 통일문제 토크쇼 열어

경남 진주시협의회(회장 원호영)는 지난 4월 20일 오전 11시 경상대학교 교양학관에서 재학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 통일문제 토크쇼–대학생 통일대한민국을 상상하다’를 개최했다.

이날 토크쇼에서는 ‘통일정책의 현주소와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민주평통 권태오 사무처장이 특별강연을 펼쳤고, 탈북민 지원단체 NAUH의 지성호 대표와 탈북민 대학생 2명이 패널로 참석해 북한에서의 생활과 남한 정착 과정, 북한 대학생들의 생활 모습을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경북 포항시협의회

제17회 포항해변 마라톤대회 개최

경북 포항시협의회(회장 김정치)는 4월 23일 오전 9시 포항종합운동장에서 자문위원과 지역주민, 마라톤 동호회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7회 통일기원 포항해변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년 열리는 포항해변 마라톤대회는 포항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영일대 해수욕장과 형산강변 체육공원을 거쳐 종합운동장으로

돌아오는 구간으로 진행됐다. 한편 포항시협의회는 경기장 주변에서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일기원 4행시 공모전도 함께 열었다.

강원 홍천군협의회

통일 염원 담아 평화의 벽 건립 메시지 작성

강원 홍천군협의회(회장 양태호)는 4월 4일 오후 2시 홍천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2018 평화의 벽·통합의 문’ 건립을 위한 서명식을 갖고 통일 메시지를 작성했다.

자문위원과 지역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서명식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2018 평화의 벽·통합의 문’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설치되는 조형물로 올

림픽 개·폐회식장과 올림픽 플라자 입구에 세워진다. 이날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작성된 메시지는 명함 크기의 동판에 새겨져 ‘평화의 벽·통합의 문’에 부착될 예정이다.

충북 충주시협의회

생태공원서 평화통일 염원 걷기 대회

충북 충주시협의회(회장 석종호)는 4월 15일 호암지 생태공원 일원에서 자문위원과 지역주민 2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0회 나라사랑 평화통일염원 충주시민 한마음 걷기 대회’를 개최했다.

통일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개최된

이날 걷기 대회에서는 참석자들이 호암지 둘레를 함께 걸으며 통일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태극 문양 바람개비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태극 문양 부채 만들기, 통일풍선 만들

기, 북한 사진전 등 다양한 통일 관련 부대행사도 함께 열렸다.

서울 영등포구협의회

평화통일 염원 리본 달기

서울 영등포구협의회(회장 김원국)는 4월 1일 서강대교 남단에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2017 평화통일 염원 리본 달기 및 통일기원 꽃탑 전시 제막식'을 가졌다.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에 맞춰 열린 이번 행사에는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이용주 영등포구의회 의장과 자문위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통일 기원 꽃탑 조형물 제막식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작성해 게시대에 전시하고, 어린이 참가자들에게는 '평화통일의 꿈, 민주평통이 함께 합니다!!'라는 통일 풍선도 나눠줬다.

충북 영동군협의회

탈북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

충북 영동군협의회(회장 정원용)는 4월 17일 영신중학교 예지관에서 재학생과 자문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탈북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를 개최했다.

'통일을 꿈꾸는 남북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통일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곽종문 한겨레중고등학교장이 강사로 나서 북한의 사회, 문화, 역사 등에 대해 강의하고, 탈북 청소년 2명이 북한의 실상을 청소년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대구 수성구협의회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 실시

대구 수성구협의회(회장 신철범)는 4월 11일 11시 오성고등학교 시청각 교육실에서 재학생 700여 명을 대상으로 '통일의 주인은 우리입니다'라는 주제로 청소년 통일 교육을 실시했다. 북한 출신의 방소연 강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북한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문화 등에 강의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전북 부안군협의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안보현장 견학

전북 부안군협의회(회장 이영식)는 4월 1일 자문위원, 부안여고 학생과 교직원 등 40여 명과 함께 통일미래세대 통일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날 견학에서는 판문점과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돌아오지 않는 다리 등을 방문했다.

부안군협의회는 통일안보현장 견학에 이어 이날 행사를 바탕으로 통일안보 감상문 대회를 진행해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 달서구협의회

탈북자녀 5명에게 장학금 전달

대구 달서구협의회(회장 김옥열)는 4월 8일 달서구청 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가

졌다. 자문위원과 관련 공무원 등 10여 명이 함께한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지역 내 탈북민 자녀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전달된 장학금은 지난 연말에 열린 '북한이탈주민 자녀 장학금 마련 먹거리 초대전'의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대전 대덕구협의회

탈북민 합동결혼식 개최

대전 대덕구협의회(회장 강덕구)는 4월 11일 대전 송촌장로교회에서 자문위원과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탈북민 2쌍의 합동결혼식을 열고 이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민주평통의 대전 지역 5개구 협의회가 힘을 모아 마련한 합동결혼식은 올해로 8회를 맞이했으며 지금까지 모두 29쌍의 부부가 탄생했다.

경기 부천시협의회

자문위원 안보현장 견학 실시

경기 부천시협의회(회장 김기명)는 4월 4일 분단의 역사를 되새기며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자문위원 30명이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날 안보 견학에서 자문위원들은 임진각과 공동경비구역(JSA) 안보견학관

과 판문점 등을 견학했다.

부천시협의회는 분단의 현실을 통해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느끼고 통일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안보현장 견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 김해시협의회

멘토–멘티 그룹토론회 개최

경남 김해시협의회(회장 안병석)는 4월 15일 협의회 사무실에서 탈북민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멘토링 그룹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멘토 자문위원과 탈북민 자녀와 학부모 등 20여 명이 함께 했다.

토론회에서 멘토 자문위원과 멘티 청소년들의 자기소개와 함께 탈북 청소년들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방법이 논의됐다.

또한 자문위원과 탈북민 청소년들이 함께 한국의 역사·문화·언어에 대한 문제를 맞히는 퀴즈대회도 함께 진행했다.

김해시협의회는 탈북 청소년과 탈북민의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멘토–멘티 사업'을 마련했으며 분기별 그룹토론회와 함께 자문위원과 탈북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진로 상담과 장학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남 무안군협의회

고등학교 통일 동아리 출범

전남 무안군협의회(회장 김정훈) 지난 4월 18일 백제고등학교 회의실에서 '제2기 고등학생 통일동아리 출범식'을 가졌다.

자문위원과 학생, 교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출범식에서는 동아리 대표 학생의 활동 선서와 올해의 활동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백제고등학교의 통일 동아리 '한반도와 독도'는 청소년들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 4월 무안군협의회와 백제고등학교의 업무 협약을 통해 만들어졌다. 무안군협의회는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올바른 통일관과 국가관 형성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경기 과천시협의회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1일 문화체험

경기 과천시협의회(회장 이순형)는 4월 15일 자문위원과 탈북 청소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랜드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문화체험 행사를 가졌다. 참석한 청소년들은 자문위원들과 함께 놀이기구 탑승과 미술관 전시회를 관람했다.

이번 문화체험 행사는 탈북 청소년들의 조기 정착을

돕고 다양한 남한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천시협의회는 앞으로도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 제주시협의회

탈북민과 함께하는 김장 나눔

제주도 제주시협의회(회장 임강자)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홍영선)는 4월 8일 여성 자문위원과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 멘토링 가족 등과 20여 명이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김장 나눔 행사에서 만들어진 김장 김치는 제주지역 탈북민 15명에게 전달됐다.

이날 김장 후에는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추억 만들기' 행사도 이어져 멘토 자문위원과 멘티 탈북민들이 벚꽃 나들이도 함께 했다.

경북 구미시협의회

탈북민 무료 건강검진 실시

경북 구미시협의회(회장 김철호)는 4월 8일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서 탈북민 50명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구미시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와 사회복지분과위원회가 지역 내 탈북민들의 정착 실태를 파악하고 의료, 보건 분야에 필요한 도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구미시협의회는 탈북민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매년 체육대회, 유적지 견학, 김장 나눔, 명절 망향제 등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다.

경남 통영시협의회

대학생 통일문제 토크 콘서트 열려

경남 통영시협의회(회장 모경책)는 4월 12일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2017 대학생 통일문제 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번 통일 토크쇼는 통일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북한의 최근 변화와 통일준비'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크쇼에는 자문위원과 경상대학교 통일 동아리 학생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북한인권청년단체 NAUH의 지성호 대표와 탈북민 출신 패널 2명이 통일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북한의 실상과 탈북 과정, 남한 정착 과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토크 콘서트 후에는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통일 동아리 학생들의 조별 발표회와 통일동아리 임원진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대전 동구협의회

청소년 통일리더십 캠프 개최

대전 동구협의회(회장 남진근)는 4월 5일부터 7일까지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서 우송중학교 학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청소년 통일리더십 캠프'를 개최했다.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 주역으로서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캠프에서는 통일뉴스 만들기, 통일한국 만들기(분단 전후 남북한 알아보기), 통일 채널e(통일생각 표현하기), 통일 영화 시청 등을 체험하고,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관람했다.

목포시·대구 중구협의회

영·호남 자매결연 합동회의 개최

전남 목포시협의회(회장 우승하)와 대구 중구협의회(회장 이진모)는 4월 13일과 14일 1박 2일 동안 영·호남 자매결연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자매결연 활동을 통해 통일활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사회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양측 협의회 소속 자문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합동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두 지역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지역의 벽을 허물고 행복한 통일시대를 맞이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목포시와 대구 중구협의회는 지난 2012년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두 지역을 번갈아가며 정기적으로 교류행사를 갖고 있다.

충남 청양군협의회

통일음식 명인과 함께 북한음식 체험

충남 청양군협의회(회장 강석중)는 4월 17일과 18일에 걸쳐 청신여자중학교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북한음식 체험과 북한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들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통일음식 연구가 명인 1호인 장유빈 씨를 강사로 초청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탈북 과정과 남한 정착은 물론 북한

에서 보낸 청소년 시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에서 강사와 학생들이 두부밥과 꼬리떡 요리를 만들었다.

경기 평택시협의회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 실시

경기 평택시협의회(회장 유승익)는 4월 7일 태광중학교에서 재학생과 교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북한바로알기'라는 주제로 청소년 통일안보 교

육을 실시했다. 북한 출신의 이유경 씨가 강사로 나서 탈북 과정과 남한 정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과 교육 등에 대해 소개했다.

서울 서대문구협의회

북한 인권 북 콘서트–통일 토크쇼 열려

서울 서대문구협의회(회장 한운섭)는 4월 6일 다산북스에서 '북한 인권 북 콘서트–대학생 통일문제 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날 북 콘서트에는 자문위원과 지역주민, 대학생 등이 함께 통일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콘서트 1부는 임상순 평택대학교 박사가 '북한 인권에 관한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고, 2부에서는 도희윤 민주평통 청년위원장이 '반디'라는 필명으로 북한에서 활동하고는 작가의 '고발'이라는 책을 통해 평범한 북한 시민들의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 남해군협의회

통일시대 시민교실 토크콘서트 개최

경남 남해군협의회(회장 최홍백)는 4월 5일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문위원과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통일시대 시민교실은 대북 정책의 이해를 높이

고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시민교실에서는 강동완 동아대 교수의 사회로 탈북민 2명과 청년 대표 1명이 함께해 북한 주민들의 실상과 탈북 과정에 대해 들여주고, 남한 정착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이날 토크 콘서트와 함께 북한 청봉채 붓글씨를 전수받은 탈북민의 붓글씨 시연과 공연도 함께 펼쳐졌다.

북유럽협의회 체코분회

청소년 통일골든벨 본선 진출자 가려

북유럽협의회 체코분회(분회장 김만석)는 4월 7일 프라하 한글학교에서 '2017 청소년 통일골든벨' 체코지역 예선전을 개최했다. 교포 청소년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역사 공부하자! 통일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초·중·고등부로 나눠서 진행된 체코지역 예선 대회에서는 고등부의 강소망 양이 최우수상을 수상해 오는 6월 파리에서 열리는 북유럽 지역 결선에 체코지역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통일 골든벨 예선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승현 주체코 대사가 우리 역사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특강을 펼쳤다.

오렌지샌디에이고협의회

17기 활동을 모은 '통일로 가는 길' 발간

오렌지샌디에이고협의회(회장 권석대)는 4월 20일 웨스트민스터의 럭스에서 자문위원과 교민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로 가는 길'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 '통일로 가는 길'에는 ▲통일 골든벨, ▲청년 안보비전 발표대회, ▲서울대 통일아카데미, ▲서해 5도 고교생 장학금 전달 등 17기 자문위원들이 임기 동안 활동했던 모습들이 사진과 함께 정리되어 있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 후에는 로버트 홍 재미탈북자지원회장이 '탈북민들의 이민생활과 지원'이라는 주제로 통일 강연을 했다.

미국 시카고협의회

전문가 초청 북한 인권 강연 열어

미국 시카고협의회(회장 이문규)는 4월 11일 드폴대학 링컨팍학생센터에서 단현명 NIU 법대 교수, 홍성환 ENoK 대표, 댄 청 크로싱 보더스 대표를 강사로 초청해 북한 인권과 종교탄압의 실상에 관한 통일강연회를 개최했다.

'The North Korean Genocide; Jerusalem of the East No More'(북한 집단 학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단현명 교수는 북한의 종교 탄압에 대해 지적하며 "북한의 종교와 인권에 대한 탄압은 최악의 상황이며, 전 세계

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홍성환 대표는 "미국에 정착하는 탈북자들은 초기에는 의료와 교육 등의 지원을 받지만 곧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영어를 할 줄 몰라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교민 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는 이종국 주시카고 총영사를 비롯해 자문위원과 교민, 유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집트지회

북한 수용소 실상 담은 특별전시회 열어

이집트지회(지회장 조경행)는 4월 7일과 8일 양일간 카이로 시내 한국학교 강당에서 '북한 인권실태 고발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전시회는 탈북화가들이 직접 경험했던 수용소의 실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 40점이 전시됐다. 전시된 그림에는 수용소에서 사용하는 고문 도구들이 형태와 길이까지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수용자들이 고문당하는 장면, 굶주림에 독초를 뜯는 모습과 같은 잔혹한 북한 수용소의 실상이 그대로 담겨있다.

조경행 지회장은 "이번 전시회가 이집트 국민들에게 북한의 처참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집트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칭다오협의회

청소년 대상 통일 백일장·사생대회 개최

중국 칭다오협의회(회장 이영남)는 4월 8일 칭다오 한국국제학교에서 '2017 칭다오 청소년 통일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자문위원과 재학생, 인근 지역 10개 학교 재학생, 지역 청소년 등 250여 명이 참가했다. 청소년들의 평화통일과 남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의 백일장 주제는 '북녘 친구들에게 편지 쓰기'가 제시됐고, 사생대회 부문에서는 '한반도 통일 희망'이 주제로 제시됐다. 대회를 준비한 칭다오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해외에서 생활하는 한국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올바른 통일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글라데시지회

평화통일 글짓기 & 그림 그리기 대회

방글라데시지회(지회장 윤희)는 4월 1일 다카한인학교에서 '2017 평화통일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8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통일관 확립과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의 주제는 '통일된 미래', '평화통일을 위해 해야 할 일' 등이 제시됐다.

1

통일 콘서트, 통일안보 견학… 청소년 통일 인식 쑤욱~ 향상

통일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는 조급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부안군협의회의 느리지만 꾸준한 통일 활동은 이미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나에게 통일이란 농사다. 각고의 노력 끝에 얻는 값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통일이란 수레바퀴다. 남북은 분단되어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굴러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전북 부안여자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청소년 통일 드림 토크콘서트' 이후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저마다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다. 누군가는 '쉽게 발견할(이루어질) 수 없는 네잎클로버'라고도 했고, 누군가는 '떨어져 있는 자석의 N극과 S극'이라고 했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모두가 한마음이었다. 통일은 반드시 이뤄야만 할 과제이자 숙명이라는 것. 전북 부안군협의회 이영식 회장은 통일 콘서트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에 주목했다.

"지난해 처음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통일 콘서트를 기획해 진행했어요. '청소년이 말하고 싶은 통일 이야기'를 주제로 약 60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했죠. 거창한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통일 이야기, 그들이 직접 통일을 상상하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어요. 나중에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 들어보니, 그간 통일에 안일했던 학생들이 통일 관련 질문을 부쩍 많이 하는 등 변화한 모습을 보였다는군요."

이 회장은 청소년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던 점이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지난 4월 6일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동하고 판문점으로 통일안보 현장 견학을 다녀온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2

3

4

1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지역대회에 참가한 학생들과 이영식 회장. 2 부안군협의회가 직접 제작한 통일 홍보 전단을 관내 청소년에게 나눠주고 있다.
3 부안여고 학생들의 통일안보 현장 견학 모습. 4 백산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일안보 현장 견학 모습.

"작년에 백산중·고등학교 재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1박2일에 걸친 통일안보 견학을 실시했어요. 올해도 40여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경기도 파주의 제3땅굴과 판문점으로 안보 견학을 다녀왔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로만 듣던 역사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본 학생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어요. 울컥해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휴전 중인 우리의 현실과 안보의 중요성을 깨닫는 동시에,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하는 이유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의 호응이 워낙 좋아 학교 측에서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정기적 행사로 제안했을 정도란다. 실제로 이와 연계한 '통일 감상문대회'를 준비해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을 위한 통일의 장 꾸준히 마련

부안군협의회의 청소년 통일교육은 통일 콘서트, 통일골든벨, 안보 현장 견학 외에도 홍보 전단 제작, 통일 사진·동영상 콘테스트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부안 관내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통일 의식을 고취하는 홍보 전단을 만들어 배포했다. 글자만 빼곡한 지루한 전단이 아닌, 만화를 접목한 재미있는 전단을 제작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미래 통일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만화를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어요. 북한 실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만화를 통해 친근감을 전달하고 통일의 필요성도 강조했죠. 올해에도 관내 중·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통일 전단지 배포를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부안군협의회의 청소년 통일교육 활동은 매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회장은 "우리 협의회는 청소년 관련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지금의 청소년들, 즉 미래의 통일 세대들은 우리 같은 전쟁 세대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통일에 대한 생각이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제적인 교육이 아닌, 청소년 스스로 통일의 주인공이 되어 통일을 상상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홍보 전단 배포를 시작으로 통일안보 현장 견학, 통일골든벨, 통일 콘서트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구체화하고, 통일관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순 없지만 지금처럼 하나둘 청소년 통일교육을 늘려나간다면 통일은 우리 가까이에 성큼 다가서 있을 것이라고 이 회장은 강조한다.

"청소년이 통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먼저죠. 지금의 학생들은 통일시대를 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남북 분단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자발적인 통일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오는 5월 말 이 회장은 자문위원들과 함께 백령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수시로 통일안보 현장을 찾는다는 그는 천안함 폭침 7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방문한 백령도의 모습을 떠올리며 잠시 눈물을 훔쳤다.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46명의 천안함 용사들을 기리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고귀한 희생에 비해 너무 빨리 잊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최근 국내외 정세가 어지럽지만 이럴 때일수록 통일 국론 결집에 주력하고 계층과 이념, 지역과 세대 갈등 완화를 위해 민주평통이 힘써야 합니다.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지금처럼 정진해나가겠습니다." NUAC

개화와 근대화의 시발점인
강화도 초지진에 기대어 바다를 보며
생각한다. 역사의 영욕을 겪으며
지금에 이른 강화 땅에서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 초지진 2 양헌수 승전비

강화도는 구석기 유적부터 근대 문화유산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의 흔적이 가득한 섬이다. 발길 닫는 곳마다 역사의 현장이다. 전등사, 광성보, 초지진 등 강화도의 근대사 현장을 둘러보다 보면 이 난세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경수 안양대 강화역사문화연구소 연구원

외세 침략에 맞선 호국의 함성이 바람에 실려 귓가에 맴도네

역사 없는 땅이 어디 있으랴. 그럼에도 강화도는 좀 특별하다. 구석기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의 흔적이 섬 안에 가득하다. 신록 고운 길 따라 걸으면 그게 그대로 또 하나의 역사가 되는 섬이 강화도다. 오늘은 근대의 물결을 따라가본다. 강화도의 상징 같은 전등사에서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전등사 대웅보전을 한 바퀴 돌아본다. 추녀 밑 나녀(裸女)상은 언제 봐도 인상적이다. 도편수를 배신한 여인의 형상이라는 전설은 사실 여부를 떠나 흥미롭다. 이 절은 고구려 소수림왕 때인 381년에 세웠다고 전한다. '천년 고찰'도 대단한데 여기는 1000년에 600년을 더해야 한다. 절 마당 나무 그늘에 앉아 대웅전을 올려다보니 고풍스러운 기운이 전해온다.

부처님 오신 때라 더욱 활기가 넘친다. 대조루, 약사전, 명부전을 거쳐 〈조선왕조실록〉을 모셨던 정족산사고까지 가보고 돌아선다. 잘 가라는 새소리를 뒤로하며 잠시 걸으면 동문. 전등사의 출입문처럼 쓰이다 보니 답사객들이 무심히 지나친다.

전등사를 품고 있는 산이 정족산이다. 이 산에는 빙 둘러 산성이 있는데 정족산성이다. 정족산성은 삼랑성이라고도 부른다.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전설이 있다. 〈고려사〉 등에 실려 있을 만큼 유래 깊은 이야기이다.

삼랑성 동문 바로 안쪽에 있는 작은 비각 하나. 어느 스님의 행적을 기리는 비겠거니 여기기 쉬운데 사실은 양헌수 장군 승전비이다. 양헌수 장군은 병인양요(1866) 때 프랑스군을 격파한 인물이다. 그런 인물의 승전비가 왜 여기에? 바로 이 자리가 조선군이 프랑스군을 무찌른 곳이기 때문이다.

적을 무너뜨린 조선군의 기개

약 150년 전. 산성에 몸을 숨기고 적을 기다리는 조선군. 숨 막히는 침묵, 그리고 사격 개시. 쌍방 간 치열한 총격전. 고함, 비명, 뿌연 화약 연기. 거듭 쓰러지는 프랑스군. 결국은 퇴각. 프랑스군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무기로 싸워 적을 무너뜨린 조선군의 기개, 그리고 함성, 뜨거운 눈물….

강화도 갑곶에 상륙한 프랑스군은 이내 강화부를 점령

한다. 프랑스군은 선교사 학살 관련자 처벌과 통상조약 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이 결정한 것은 무력 대응. 대원군은 프랑스군을 치기 위해 순무영을 설치하고 양헌수 등을 강화도로 보냈다. 양헌수는 포수군 중심의 500여 병력을 이끌고 정족산성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병사들을 수습한 후 강화읍내로 진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프랑스군이 먼저 읍내에서 정족산성까지 와서 양헌수 부대를 공격했던 것이다.

정족산성 전투에서 패한 프랑스군은 황급하게 강화도에서 철수한다. 곱게 갔으면 좋으련만 그러지 않았다. 읍내에 불을 질러 다 태우고 외규장각도 태웠다. 수천 권의 귀한 책들이 재가 되었다. 그들이 탈취해갔던 수백 권의 어람용 의궤는 우여곡절 끝에 국내로 돌아왔다. 지금 고려궁지 안에 외규장각 건물이 복원돼 있다.

대략 한 달 동안 프랑스군에게 읍내가 짓밟혔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에 큰일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병인양요 당시 강화의 지도층으로서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버린 인물이 있었다. 이시원이다.

그는 "죽어서 사나운 귀신이 되어 이 밝고 밝은 세상에서 저 추악한 무리(프랑스군)로 하여금 스스로 섬멸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자결했다. 이시원의 손자가 조선 양명학(강화학파)의 큰 별인 이건창이다.

운요호 사건과 강화도조약

너무 넓지도 그렇다고 좁지도 않은 푸근한 전등사 품에서 벗어나 광성보로 향한다. 병인양요를 겪고 불과 5년 만에 조선은 미국의 침략을 받게 된다. 이번엔 신미양요(1871)다. 프랑스도 미국도 왜 하필 강화도만 공격하는가. 강화도가 서울로 올라가는 길목이기 때문이다. 강화도를 장악해야 서울의 숨을 조일 수 있다. 광성보는 조선군이 미군과 최후의 격전을 치른 곳이다.

문루를 지나 오른쪽 숲길로 들어서면 멀지 않은 곳에 쌍충비각이 서 있다. 전투를 지휘했던 어재연 장군과 그의 동생 어재순의 순절을 기리는 비다. 전투가 있기 얼마 전 어재순이 형을 찾아 광성보에 왔다. 어재연은 동생을 돌려보내려 했다. 아마도 "너는 살아서 집안을 이끌어라"라고 말하고 싶었을지 모른다. 동생도 형의 속마음을 헤아렸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았다. 공부밖에 몰랐던 선비 어재순은 빼어난 병사처럼 싸우다 형과 함께 전사했다. 어재연 형제의 순절비에 이렇게

1 프랑스군을 격퇴한 현장인 전등사. 2 병인양요 때 소실됐다 복원된 외규장각. 3 광성보 광성돈대

쓰여 있다. "형은 나라 위해 죽고, 아우는 형을 위해 죽으니…."

쌍충비각 바로 아래는 신미순의총이다. 미군과의 싸움에서 전사한 조선군의 시신을 함께 모신 묘소다. 미군의 거친 포격에 광성보 어재연 부대는 큰 타격을 입었다. 몸이 새카맣게 타버렸거나 포탄에 맞아 산산조각이 난 동료의 시신을 보면서도 조선군은 도망가지 않고 버텼다. 포격이 끝나자 미군이 공격해왔다.

조선군은 맹렬하게 싸웠다. 살벌한 백병전, 싸우다 쓰러져도 포기하지 않았다. 흙을 집어 미군의 얼굴에 뿌리며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싸우고 또 싸웠다. 많은 전투를 치러온 미군이지만, 이렇게까지 나라를 위해 온몸으로 맞서는 병사들을 처음 보았다고 했다. 아무튼, 남북전쟁 등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은, 절대적으로 우세한 무기를 갖춘 미군을 조선군은 이겨낼 수 없었다. 목면으로 두툼하게 만든 방탄조끼도 소용없었다.

어재연 형제를 비롯해 수백 명의 조선 수비군이 전사했다. 수습된 병사들의 시신을 모신 곳이 신미순의총이다. 이윽고 손돌목돈대. 격전의 현장이 바로 여기였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역사의 현장이다. 바닷가로 내려가면 용두돈대가 있다. 손돌목의 거친 물소리가 마치 우리 병사들의 절규 같다.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갑곶에 상륙해 지금의 읍내를 점령한 데 비해 신미양요 때의 미군은 강화도 동남쪽 해안가에 집중했다. 그들은 초지진에 상륙해 덕진진을 점령하고 이내 광성보로 쳐들어왔다. 미군은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미군의 개항 요구를 거부했다. 오래 머물 형편이 못 된 미군은 어쩔 수 없이 철수한다.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귀환이었다.

결과적으로 조선 조정은 프랑스군과 미군을 격퇴한 셈이다. 그런데 우리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비판하기도 한다.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고집해서 쓸데없는 전투를 벌였다는 것이다. 차라리 그때 개항해서 근대화를 추진했다면 성공했을 거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리기에는 당시 국내외 상황이 너무도 복잡했다.

쇄국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주장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어떤 견해를 갖든 그것은 개개인의 몫이다. 다만 강대한 외적의 침략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맞섰던 선조들의 죽음의 가치만큼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 같다.

굴욕, 치욕감보다 냉정한 복기 필요

광성보에서 차로 잠깐이면 초지진에 닿는다. 초지진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아무 건물도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소나무 벗삼아 우뚝 선 초지돈대가 있을 뿐이다. 미군이 상륙할 당시 초지진의 조선 수비군은 제대로 방어전을 펼칠 수 없었다. 미군의 함포 포격에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나 운요호 사건(1875) 때는 달랐다. 초지진에 상륙하려는 일본군에 맞서 끈질기게 싸웠고 드디어 격퇴했다. 운요호는 애초 상륙 의도가 전혀 없이 강화 수비군의 포격만 유발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꼬박 이틀 동안 초지진을 공격하며 상륙을 시도했지만 조선군의 반격을 뚫지 못하고 물러간 것이다. 초지진 벽 곳곳에 그리고 소나무에까지 포탄에 맞은 흔적이 있다. 신미양요 때 그런 것인지 운요호 사건 때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전투의 상흔 속에서 뜨거움을 본다.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조약(1876)을 맺고 개항하게 된다. 조약을 맺은 장소는 연무당. 지금 강화산성 서문 안 공터에 연무당 옛터라고 새긴 비가 서 있다. 강화도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이기도 하다. 치외법권을 비롯해 조선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다 보니 강화도조약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는 말도 나온다.

일본이 개항하면서 미국과 맺은 조약도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개항 이후 한동안 승승장구했다. 조선이 망한 것은 강화도조약 때문이라기보다 개항 이후의 대처가 슬기롭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

흔히 강화도조약을 평가할 때 '굴욕적이다', '치욕적이다'라고 한다. 일본을 그만큼 낮춰보고 내린 평가다. 하지만 냉정하게 볼 때 당시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네덜란드를 통해 서양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근대적 체질을 갖췄다. 경제 수준도 우리보다 나았다. 특히나 서양식 무기를 구비해 군사력까지 강화한 상태였다. 굴욕, 치욕을 말하기에 앞서 왜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지 냉정한 복기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바람이 분다. 늘어졌던 초지진 깃발들이 일제히 일어나 펄럭인다. 깃발은 펄럭여야 힘이 느껴진다. 개화와 근대화의 시발점인 강화도 그리고 초지진. 여장에 기대어 바다를 보며 생각한다. 영욕, 그래 영욕이다. 모든 걸 겪으며 지금에 이른 강화 땅에서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NUAC

북맹(北盲) 탈출이 먼저다

김 영 수
–
서강대 정외과 교수

서강대 정치학 박사. 서강대 부총장, 일본 게이오대 방문교수, 북한연구학회 회장 역임. 현재 민주평통 통일정책분과위원장과 통일부·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숙청됐다던 김원홍이 김일성 생일 행사에 나타나자 정부가 북한을 너무 모른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별 한 개로 강등됐다던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다시 별 넷을 달고 나타났으니 그럴 만도 하다. 수척한 모습을 보니 꽤나 고생한 것 같다는 추정 속에 아직 실상을 모르니 더 지켜보자는 통일부 해석이 고작이다.

통일의 미래를 보는 감각과 능력도 깜깜하기는 매한가지다. 흔히 통일되면 남북한이 하나로 어우러져 멋진 세상을 맞이할 것인 양 상상한다. 북한 교실에 남한 출신 어린이들이 북한 어린이들과 섞여 사이좋게 공부하는 모습을, 남한 교실에도 북한 출신 어린이들이 이주해와 반반씩 섞이는 미래를 곧잘 상상한다. 그러나 그런 미래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북한 교실에는 북한 출신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일 뿐 남한 아이들이 반반씩 섞여 교육받는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

합의 통일이라는 말처럼 비현실적인 용어도 없다. 분단 이후 오랜 시간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이 전혀 다르게 살아온 이들이 매사 합의를 이룰 거라고 상상하는 것이 너무 한심하다. 2만8000여 개의 김일성 동상과 17만여 개의 김정일 좌상은 통일 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명산마다 새겨져 있는 김씨 일가 우상화 바위 글씨는 어찌 복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북한의 상징을 없애는 일을 북한 주민들이 가만히 지켜볼 걸로 내다보는 그 상상력이 참으로 놀랍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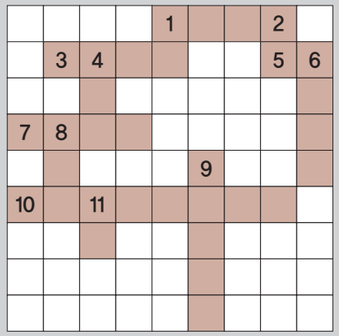
북한 주민의 마음도 못 얻은 채 통일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는 통맹(統盲) 수준에서 우리는 통일을 얘기하고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꿈꿔왔다. 남남북녀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를 통일 얘기만 하면 꺼내들기도 하고, 북한의 노동과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합치면 멋있는 조합을 이룬다는 허망한 융합을 정부 수준에서 곧잘 내세웠다.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뭣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검토하지 않았다. 당연히 우리 기준이 동질성 회복의 잣대라는, 다분히 우리 중심적 통일 상황을 전제해왔다. 이게 우리 통일 준비의 현주소다.

통일 공감대 형성도 북한을 알아야 가능하다. 북한의 실상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펼치는 통일 논의는 한마디로 공허 그 자체다. 지금까지 발표된 통일 비용 수치도 그냥 숫자에 불과할 정도로 의미가 없다. 어떤 상태에서 남과 북이 만나고, 그 호응도가 얼마인지가 통일 비용 산출에 절대적이고 결정적이다. 특히 통일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통일 비용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NUAC

통일 퍼즐

온 가족이 함께 풀어요!

〈통일시대〉에서는 확고한 안보의식을 확립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며,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통일시대〉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통일퍼즐'을 만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통일퍼즐을 풀면서 통일 관련 상식도 쌓고, 문화상품권 당첨의 행운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가로

01 4월 5일 한국 0000 대표팀이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경기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이곳에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죠.
03 1894년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이뤄진 우리나라의 근대화 개혁.
05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
07 1871년 미국 함대가 강화도에 쳐들어온 사건.
10 4월 14일 일본 오사카에서 민주평통 주최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일 협력'을 주제로 000000000이 열렸어요.

세로

01 나그네의 길 떠나는 차림.
02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
04 지구에 있는 다섯 개의 큰 바다.
06 손연재가 유명하죠. 북한에선 예술체조라고 불러요.
08 무수단 000, 대포동 000.
09 전국 고등학생들이 통일 시사상식과 역사 상식을 겨루는 민주평통 행사.
11 강원도에 있는 도시.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리죠.

126호 4월호 〈통일퍼즐〉 정답

태	양	절						교
극						한	한	류
기	대	승					중	
	학					탕	평	책
	원	안					화	
		보		백	두	혈	통	
독	수	리	훈	련			일	본
	중						포	
	릉					부	럼	

지난 호 〈통일퍼즐〉 당첨자

안민지(인천시 부평구), 양태평(울산시 북구), 이면세(경기도 양주시), 박순옥(강원도 정선군), 김유록(서울 서초구) 강태균(부산시 해운대구), 정영조(대전 대덕구), 장덕희(경기도 의정부시), 이민준(전북 남원시), 김승진(경기 동두천시)

위 빈칸의 답을 5월 20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열 분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힌트 〈통일시대〉 5월호(제127호)에 실린 내용을 참고하세요.
보내실 곳 우편번호 04605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통 〈통일시대〉 '통일퍼즐' 담당자
이메일 jmisug@korea.kr ※ 이메일로 보내실 때에는 문화상품권을 받으실 주소를 꼭 적어주세요.
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마감일 이후에 보내신 이메일은 수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